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의정

제18호 2025
2024.7.1.~2025.6.30.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제9대 해운대구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하며,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CONTENTS



05 기본현황

06 해운대구의의회 연혁

08 제9대 후반기 의원 현황

10 선거구별 의원 현황

11 의안처리

12 회기별 의안처리

20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7 5분 자유발언

104 건의안·결의안

112 연구단체활동

116 의정스케치



해운대구의의회
홈페이지



해운대구의의회
유튜브

제18호 2024.7.1.~2025.6.30.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해운대구의의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Tel. 051)749-4091 Fax. 051)749-4099

발행인 해운대구의의회 의장 장성철

디자인/인쇄 (주)대주애드 051)803-6631

구민의 뜻과 바람을 더욱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해운대구의회 의장 장성철입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2025년 해운대의정」을 펴내게 된 지금, 마음 한켠에 깊은 감사와 설렘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로 해운대구의회에 힘이 되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해운대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심의해 왔습니다. 특히 주거·복지·문화·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자 힘써 왔습니다. 모든 성과의 바탕에는 언제나 아낌없이 동참하고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제9대 해운대구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구민의 뜻과 바람을 더욱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듣는 따뜻한 의회로 남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길 위에서 여러분 마음 가까이 머무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장

장 성 철



council.haeundae.go.kr

01

기본현황

- 해운대구의회 연혁
- 제9대 후반기 의원 현황
- 선거구별 의원 현황



● 해운대구의회 연혁

해운대구의회는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 1 대
1991~1995

- 1991.03.26 초대의원 선거(20명)
- 1991.04.15 초대 의회 개원 및 의장단 구성(의장 이태옥 | 부의장 최해주)
- 1993.04.13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최해주 | 부의장 신중복)

제 2 대
1995~1998

- 1995.06.27 제2대 의원 선거(20명)
- 1995.07.10 제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윤경현 | 부의장 박정희)
- 1996.12.31 제2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신중복 | 부의장 황준연)

제 3 대
1998~2002

- 1998.06.04 제3대 의원 선거(14명)
- 1998.07.08 제3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정홍정 | 부의장 윤정춘)
- 2000.07.07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박정희 | 부의장 허훈)

제 4 대
2002~2006

- 2002.06.13 제4대 의원 선거(15명)
- 2002.07.10 제4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김영수 | 부의장 양철용)
- 2004.07.09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김용환 | 부의장 정장춘)

제 5 대
2006~2010

- 2006.05.31 제5대 의원 선거(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 2006.07.06 제5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박선동/부의장 서강식)
- 2008.07.05 제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안상호/부의장 정성철)

제 6 대
2010~2014

- 2010.06.02 제6대 의원 선거(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 2010.07.06 제6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라외순 | 부의장 윤병주)
- 2012.07.06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이안호 | 부의장 홍성운)

제 7 대
2014~2018

- 2014.06.04 제7대 의원 선거(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 2014.07.16 제7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이문환 | 부의장 이명원)
- 2016.07.16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정성철 | 부의장 이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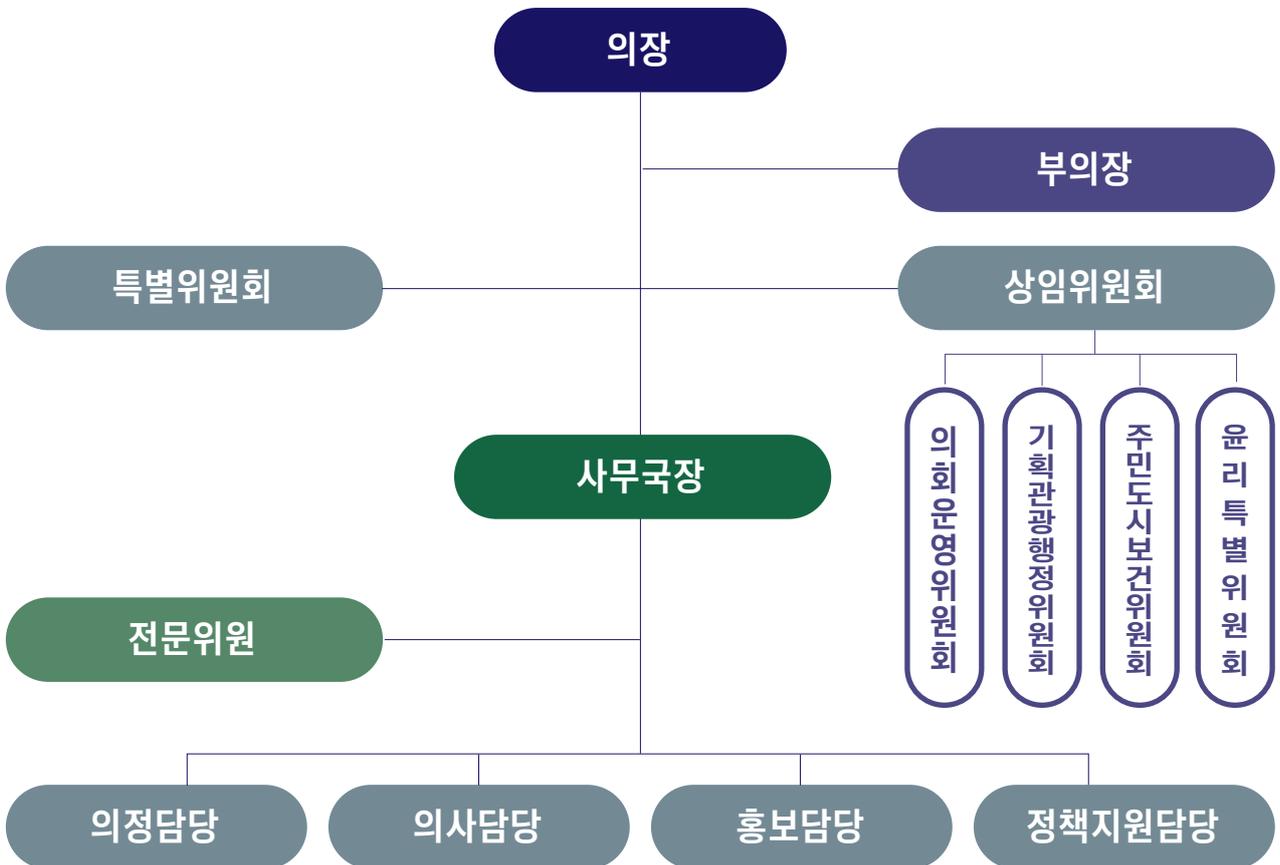
제 8 대
2018~2022

- 2018.06.13 제8대 의원 선거(18명>지역구 16명, 비례 2명)
- 2018.07.03 제8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이명원 | 부의장 임말숙)
- 2020.07.01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이명원 | 부의장 장성철)

제 9 대
2022~2026

- 2022.06.01 제9대 의원 선거(20명>지역구 18명, 비례 2명)
- 2022.07.05 제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심윤정 | 부의장 김백철)
- 2024.07.11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장 장성철 | 부의장 김성군)

의회조직도



제9대 후반기 의원 현황

2024.7.1.~2025.6.30.

의장
장성철

부의장
김성균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영숙	위원장 유점자	위원장 박성식	위원장 최명진
부위원장 송민우	부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박지해
위원 김상수	위원 심윤정	위원 문현신	위원 심윤정
최은영	원영숙	김경호	문현신
서창우	김백철	최명진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서창우	서창우
이상곤	나근호	박기훈	박기훈
나근호	박지해	김성균	김미희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의장 장성철



부의장 김성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원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최명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문현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김경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상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최은영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서창우
의회운영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김백철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상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나근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지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송민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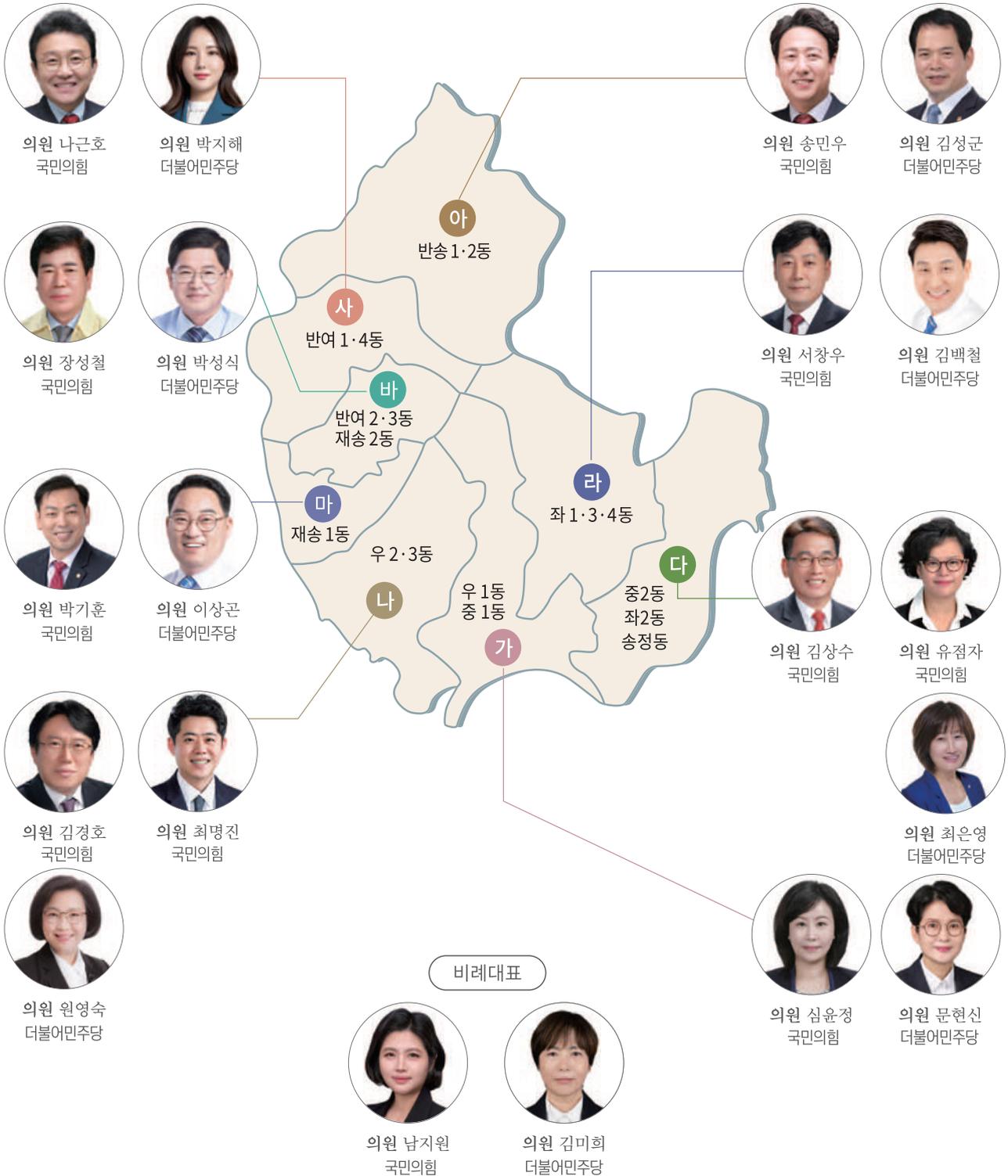


남지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미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거구별 의원 현황



원내 대표	국민의힘	김상수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council.haeundae.go.kr

02

의안처리

- 회기별 의안 처리
-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 5분 자유발언
- 건의안·결의안



회기별 의안 처리

개최현황

회기일수

- ▶ 총8회, 99일
- ▶ 임시회 6회, 43일
- ▶ 정례회 2회, 56일

상임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 6회, 12일
-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6회, 27일
-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6회, 28일

특별위원회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회, 12일
- ▶ 윤리특별위원회 1회, 1일

회기별 처리안건

회차	회기	주요안건
제281회 임시회	2024.7.11.~7.15. (5일간)	▶ 조례안 등 의안처리
제282회 임시회	2024.7.30. (1일간)	▶ 제2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3회 임시회	2024.8.28.~9.10. (14일간)	▶ 조례안 등 의안처리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84회 임시회	2024.10.7.~10.11. (5일간)	▶ 조례안 등 의안처리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85회 정례회	2024.11.8.~12.18. (41일간)	▶ 조례안 등 의안처리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25년도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86회 임시회	2025.2.11.~2.17. (7일간)	▶ 조례안 등 의안처리
제287회 임시회	2025.4.22.~5.2. (11일간)	▶ 조례안 등 의안처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88회 정례회	2025.6.5.~6.19. (15일간)	▶ 조례안 등 의안처리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회기별 의안 처리

●의원 발의 ○구청장 제출

제281회 임시회

(2024.7.11.~7.15.)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기타안건

-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 ▷ 의 장 : 장성철
 - ▷ 부의장 : 김성군
-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최명진,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송민우
 -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선임: 심윤정, 유점자, 원영숙,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선임: 문현신, 김경호, 최명진, 김상수, 서창우, 박기훈, 박성식, 김성군, 김미희
 -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박지해, 김미희

제282회 임시회

(2024.7.30.)

기타안건

- 제2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별 의안 처리

● 의원 발의 ○ 구청장 제출

제283회 임시회

(2024.8.28.~9.10.)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해운대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5분 자유발언

- 전기차 화재, 정부는 안보이고 주민 불신만 {김미희 의원}
-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원 대책 촉구 {송민우 의원}
- 보다 나은 현수막의 역할 {이상곤 의원}
-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환경개선, 해운대구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최은영 의원}
- KTX-이음 열차 센텀역 정차 꼭 필요하다! {이상곤 의원}
- 이상은 '오고 싶은 도시?' 현실은 '가고 싶은 도시 해운대!' {박지혜 의원}

기타 안건

-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 반대 결의안 {유점자 의원}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 {원영숙 의원}
-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점자
 -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 이상곤, 최은영, 나근호, 남지원,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 ※ 위원장 : 이상곤, 부위원장: 남지원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제2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휴회의 건

회기별 의안 처리

● 의원 발의 ○구청장 제출

제284회 임시회

(2024.10.7.~10.11.)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 도시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 {김백철 의원}
- 안전한 해운대구를 위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예방 대책 촉구 {나근호 의원}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점·사용료 6천억 전액 감면은 과연 정당한가? {원영숙 의원}
- 광안리에는 드론 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미희 의원}
- 마린시티 수중방파제(이안제) 건립, 신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최명진 의원}
- 달맞이언덕과 청사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 {최은영 의원}

기타 안건

-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 {김백철 의원}
- 반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 완료
- 반송실내놀이시설 민간위탁 보고 완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2024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 제2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휴회의 건



● 회기별 의안 처리

● 의원 발의 ○구청장 제출

제285회 정례회

(2024.11.8.~12.18.)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 2025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 해운대 동백섬, 대나무군락지로 인한 수목고사와 관리부실 이대로 괜찮나? {원영숙 의원}
- 편리한 데크 지속적인 관리 {박기훈 의원}
- 해운대도서관! '구립'인가 '시립'인가 {최은영 의원}

기타 안건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비전전략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문현신, 김상수, 김백철, 박기훈,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미희
 - ※ 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김미희
-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 제28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휴회의 건

회기별 의안 처리

● 의원 발의 ○ 구청장 제출

제286회 임시회

(2025.2.11.~2.17.)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운대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촉구 {송민우 의원}
-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이상곤 의원}
- 마린시티 초고층 업무시설, 실버타운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어디로!! {원영숙 의원}
- 해운대구청은 의회의 권한과 의정활동을 침해하지 말라! {최은영 의원}
- ‘총체적 난국’ 해운대 빛축제, 이대로 가면 안된다! {심윤정 의원}
-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상곤 의원}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부산의 미래인가, 특혜의 시작인가? {원영숙 의원}
- 해운대의 랜드마크, 바다도서관 건립 촉구 {최명진 의원}
- 반여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촉구 {나근호 의원}

기타 안건

- 공정 과세 실현!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종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 건의안 {원영숙 의원}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 제2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휴회의 건



회기별 의안 처리

● 의원 발의 ○ 구청장 제출

제287회 임시회

(2025.4.22.~5.2.)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원안가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 헌법을 국민에게 {김미희 의원}
- 장애인 전동 휠체어: 도로은행, 누구의 잘못인가? {송민우 의원}
- 스마트 경로당: 노인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다 {나근호 의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상곤 의원}
- 무분별한 개발, 해운대구민 의견 반영 필요해 {최명진 의원}
- 블루라인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기금'을 협약대로 집행하라 {최은영 의원}

기타 안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최명진,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이상곤, 나근호, 김성군, 김미희
 - ※ 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 나근호
- 제2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휴회의 건

● 회기별 의안 처리

● 의원 발의 ○구청장 제출

제288회 정례회

(2025.6.5.~6.19.)

심의안건

-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 청사포를 관광명소라 부르기 전에... “공중화장실”부터 지읍시다 **유점자 의원**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 필요 **김상수 의원**
-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이상곤 의원**
- 공공시설 운영, 해운대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서창우 의원**
- 해운대구 해운대로 대로는? **이상곤 의원**
- 해운대구청은 KTX-이음 신해운대역 정착, 적극 추진하라! **최은영 의원**
- 올림픽공원 금융자사고 유치 무산, 공공성 침해와 행정 오만의 결과가 아닌가? **원영숙 의원**
-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지속가능 공공서비스 혁신 **김백철 의원**

기타 안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 ※ 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김백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심윤정, 문현신,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박지해, 남지원, 김미희
 - ※ 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서창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원영숙,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김미희
 - ※ 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 김미희
- 제28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휴회의 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회기	발의의원	의안명	소관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283회 임시회	김미희 외 6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백철 외 5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상곤 외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상수 외 10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기훈 외 4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김미희 외 8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서창우 외 8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86회 임시회	나근호 외 7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미희 외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송민우 외 6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백철 외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87회 임시회	이상곤 외 8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송민우 외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최은영 외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서창우 외 7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백철 외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상수 외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외 10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의원별(대표발의자) 현황



김상수 의원

제283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상수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근, 나근호, 김성군,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면제 혜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보건소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상수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근, 송민우, 남지원 의원
- 제안이유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시간대 구민들의 의약품 등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비용 지원과 운영시간 및 관리·감독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희 의원

제283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미희 의원
- 공동발의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의원
- 제안이유 사회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별(대표발의자) 현황



김미희 의원

제284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미희 의원
- 공동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이상곤, 박성식 의원
- 제안이유 해운대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의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구민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의회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대구의 민주적 소통과 참여 문화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6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미희 의원
- 공동발의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의원
-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특성에 맞는 대응과 예방책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시행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최은영 의원

제28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표발의 최은영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의원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및 기타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출장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의 재의결,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의견 수렴, 비용 지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무 국외출장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은영 의원

제28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최은영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송민우, 김성군,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문제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창우 의원

제285회 정례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서창우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과의 불일치 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지역의 정보화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운대구의 정보화 정책이 최신 법령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지능 정보화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서창우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박기훈, 이상곤, 송민우 의원
- **제안이유** 예술계 학교 외 해운홀에서의 학예발표 관련 공연장 대관이 불가하였으나, 해운대구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으로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의 혼선을 막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문화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별(대표발의자) 현황



김백철 의원

제283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백철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이상곤,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해운대구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하고, 이자차액 지원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더욱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대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6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백철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할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대상에 해당할 때만 해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고,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함으로써 도시 미관 및 주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대표발의 김백철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이상곤,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상에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근거와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기훈 의원

제283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박기훈 의원
- **공동발의** 서창우, 이상곤, 나근호, 김성군 의원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해운대구에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영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업소들이 법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대구 내 식품접객업소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곤 의원

제283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이상곤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며, 보육현장에서의 안정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향상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해운대구의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이상곤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해운대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 절차 중 대상자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학력, 성별 등 개인정보 사항을 없애고 간소화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포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개인정보 취득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의원별(대표발의자) 현황



나근호 의원

제286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나근호 의원
- 공동발의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장성철, 송민우,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물 절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물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민우 의원

제286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송민우 의원
- 공동발의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나근호,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지역 내 빈집의 증가는 안전 위협과 각종 위생문제 등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빈집 정비 지원과 활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표발의 송민우 의원
- 공동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근, 김미희 의원
- 제안이유 구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회 시 구민이 의사 진행 과정을 방청할 수 있도록 의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분 자유발언 현황

회기	자유발언 주제	발언자
제283회 임시회	전기차 화재, 정부는 안보이고 주민 불신만	김미희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원 대책 촉구	송민우
	보다 나은 현수막의 역할	이상곤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환경개선, 해운대구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최은영
	KTX-이음 열차 센텀역 정차 꼭 필요하다!	이상곤
이상은 '오고 싶은 도시?' 현실은 '가고 싶은 도시 해운대'	박지해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	김백철
	안전한 해운대구를 위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뎀페이크 예방 대책 촉구	나근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점·사용료 6천억 전액 감면은 과연 정당한가?	원영숙
	광안리에는 드론 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미희
	마린시티 수중방파제(이안제) 건립, 신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최명진
달맞이언덕과 청사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	최은영	
제285회 정례회	해운대 동백섬, 대나무군락지로 인한 수목고사와 관리부실 이대로 괜찮나?	원영숙
	편리한 데크 지속적인 관리	박기훈
	해운대도서관 '구립' 인가 '시립' 인가	최은영
제286회 임시회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촉구	송민우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이상곤
	마린시티 초고층 업무시설, 실버타운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어디로!!	원영숙
	해운대구청은 의회의 권한과 의정활동을 침해하지 말라!	최은영
	'총체적 난국' 해운대 빛축제, 이대로 가면 안된다!	심윤정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상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부산의 미래인가, 특혜의 시작인가?	원영숙
	해운대의 랜드마크, 바다도서관 건립 촉구	최명진
반여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촉구	나근호	
제287회 임시회	헌법을 국민에게	김미희
	장애인 전동 휠체어: 도로운행, 누구의 잘못인가?	송민우
	스마트 경로당: 노인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다	나근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상곤
	무분별한 개발, 해운대구민 의견 반영 필요해	최명진
블루라인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기금'을 협약대로 집행하라	최은영	
제288회 정례회	청사포를 관광명소라 부르기 전에... "공중화장실"부터 지읍시다	유점자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 필요	김상수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이상곤
	공공시설 운영, 해운대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서창우
	해운대구 해운대로 대로는?	이상곤
	해운대구청은 KTX-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적극 추진하라!	최은영
	올림픽공원 금융자사고 유치 무산, 공공성 침해와 행정 오만의 결과가 아닌가?	원영숙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지속가능 공공서비스 혁신	김백철	

5분 자유발언

전기차 화재, 정부는 안보이고 주민 불신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8.28.)

김미희 의원(비례대표)



발언요지

-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조치에 대한 선제적 대안 제시 요청



전기차 산업은 대한민국이 친환경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수단이며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킬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떠오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전기차 화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재 위험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 간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에 '전기차 포비아(phobia)'라는 새로운 혐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건에서 72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는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웠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으며 아파트에는 백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 한 채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주차 위치나 충전 방법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집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며 친환경 사회로의 역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차원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상 주차장 설치를 우선 권고하되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 설치 시에는 지하 1층 진·출입구에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예방 충전기, 습식 스프링클러와 질식 소화포 등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 정확성은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민들의 신속 대피와 소방 당국의 용이한 현장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불안

council.haeundae.go.kr

해소는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의 전기차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전기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배터리 관리, 과충전 방지,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과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화재예방책은 중요합니다.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38만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환경위생과

현황/계획

- 전기자동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미설치 의무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홍보 실시
-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지하 등에 설치된 충전기가 임의로 미가동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지 및 행정조치 추진 예정

재난안전과

현황/계획

-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지속
- 타 부서 현장점검 시 전기충전 안전성 점검 지원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공동주택 관리과

현황/계획

- 부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처방안에 맞춰 우리 구도 다각적인 추진방안 마련·시행 예정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합동 수시점검 실시 및 주민 대상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안전주의 사항 지속 홍보 예정





5분 자유발언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원 대책 촉구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8.28.)

송민우 의원(반송1·2동)



발언요지

- 고령 운전자 맞춤형 지원혜택 도입 제안
- 고령 운전자 및 지역 주민 대상 안내·홍보 강화
- 고령 운전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현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부산시 기준 운전 면허소지자는 203만 708명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7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산책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80대 운전자 사고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4만 238명이며,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2022년 1270건으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는 119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2024년도 6월 기준으로 441건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티머니 충전카드를, 부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제구는 현금 30만 원을, 기장군은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혜택 도입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이며 대상 기준 역시 65~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어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으며, 현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예산편성과 사업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일관된 지원 기준

council.haeundae.go.kr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수칙 안내입니다.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와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면허반납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며 지역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고령 운전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입니다. 경찰, 도로교통공단, 지역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고령 운전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보를 공유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만 하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여 자가용 사용이 필수인 경우의 어르신들에게는 면허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복지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도시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교통행정과

현황/계획

- 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사업 홍보 협조 요청
- 노인 대상 안전교실 운영 및 교통안전 캠페인·홍보물 제작 예정



5분 자유발언

보다 나은 현수막의 역할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8.28.)

이상곤 의원(재송1동)



발언요지

- 현수막은 주요 정보전달 수단이지만, 다양한 서식으로 혼란을 초래함
- 통일된 디자인 적용을 통해 시각효과와 집중도를 높일 필요 있음



저는 오늘 ‘보다 나은 현수막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홍보는 제품, 서비스, 사람, 조직 또는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광고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널리 알려 사람들의 주의를 관심을 끌어 자기가 바라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광고 학회에서는 광고를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 의사전달의 형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기능에는 정보전달 기능, 마케팅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관청의 정보전달의 기능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본 의원은 현수막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의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게시가 관련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며 적절한 정보는 필수요소로서 광고의 정보전달 기능이 최우선 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청에서는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나 정책, 알림 등을 위해서 매년 수백 장의 다양한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1년 내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수막도 공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시대에 정보도 홍수이지만 현수막 홍수도 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상업용 24개소, 행정용 60개소 게시대에 구청 명의로, 또는 각 부서별로, 각 동 행정복지 센터별로, 위탁기관별로 제각각 다양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간이 설치한 현수막과 섞여서 같이 게시되고 있어 해운대구청 차원의 현수막 설치 본래의 기능인 알림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다른 형태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은 현수막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고 집중도가 떨어져 현수막의 주 기능인

council.haeundae.go.kr

정보전달 기능에 있어 도리어 미흡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청 현수막의 바탕색과 글자색이 바뀌는 등으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 현수막의 디자인과 색상 등을 통일하여 게시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상업용 현수막과 차별화를 가져와 도리어 시각효과와 관심과 집중도가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해운대구에 맞는 디자인으로 현수막 시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보다 통일성과 청결성, 차별성, 실용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집중적 정보전달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라 해운대 부산, 해운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현수막이지만 관심과 열정으로 변화를 준다면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창조도시과

현황/계획

- 현수막 디자인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행화 추진
- 공공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부서별 활용 권장 및 홍보 실시



 **5분 자유발언**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환경개선, 해운대구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9.10.)

최은영 의원(중2,좌2,송정동)



발언요지

- 공동주택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고용 실태 파악
-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요청



선생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이 질문에 80%에 가까운 해운대구민들은 공동주택에 산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공동주택은 입주민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노동자가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룰 때 더 나은 주거환경이 완성되며 이 중에서 공동주택 노동자가 며칠만 없어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은 금세 엉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여름 에어컨 없는 좁은 경비실에서 40도에 육박하는 지열을 그대로 받으며 근무하는 고령의 경비원을 어렵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누구나 두려워 할 기본적인 근로 환경을 갖지 못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마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단 어느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선출직 구의원의 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를 향한 갑질 등

다양한 사례의 차별적 인권 문제, 그리고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쉽게 접해왔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발행한 ‘부산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책 방안’에 따르면 별도 휴게실이 없어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겸용하는 경우가 무려 70.9%였으며 휴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38.7%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이 휴게를 담보하지 못하는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내 사업장 휴게시설과 냉난방, 환기장치, 편의 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는 각 지자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2018년 11월 부산 최초로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였고 현재는 공동주택관리과로 개편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다양한 정책과

council.haeundae.go.kr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엄격해진 노동실태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법 이행에 대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몇몇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서 불법 증축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고, 광명시는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지하에 있는 경비·미화원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을 지원할 때 지원뿐 아니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2018년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90개 단지 경비실 1060여 곳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폭염기인 7~8월 2개월간은 냉방요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실질적 지원 사업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해운대구도 공동주택 노동자 현황 그리고 기본시설 등의 실태 파악부터 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공동주택을 사유재산으로 치부하며 그에 민-민 갈등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법 규정에 맞는 대책 수립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어야 우리 구민들의 삶도 더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슬로건(slogan)에 그치지 않기 위한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공동주택
관리과**

- 현황/계획**
-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 의무관리 공동주택 170개소 대상 고용환경 실태조사 실시
 - 공동주택 근로자 대상 법률상담·정신건강 서비스 등 지원 추진



 **5분 자유발언**

KTX-이음 열차 센텀역 정차 꼭 필요하다!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9.10.)

이상곤 의원(재송1동)



발언요지

- KTX-이음 센텀역 정차를 통한 동부산권 이용객 편의 증진·교통난 해소·관광 경제 활성화 노력 요청



교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탈것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짐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교통은 중요한 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는 관광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의 외부 연결망 확충이 되어 있는 센텀역 KTX-이음 열차의 정차는 구민의 생활권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균형 발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KTX-이음 열차는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2시간 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준고속열차입니다. 현재는 청량리~안동 구간이 개통되어 있으며 올 연말 전 구간의 개통을 목표로 복선 전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 뒤인 2024년 10월에 KTX-이음 열차의 정차역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이 유치 경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지역 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의 지역에 정차역이 유치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래역 등 4군데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센텀역, 신해운대역 그리고 기장역이 주요 경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부산의 주요 상업 및 주거 지역과 가까워 많은 인구가 이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KTX-이음의 특성상 모든 역에 정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차역 사이의 거리와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정작 우리 해운대구는 참 조용합니다. 서명을 받았습니까? 유치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습니까? 그냥 해운대구를 지나가는 열차에 손만 흔들고 계실 것입니까? 2019년부터 저 혼자 국회 앞에서, 코레일 앞에서 1인 시위로, 올해 그 무더운 여름 출퇴근 시간, 밤까지 센텀역 앞에서 1인 시위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council.haeundae.go.kr

있습니다.

센텀역은 KTX-이음 열차가 정차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복선 쌍섬식 승강장, 161개 면의 주차장 확보, 상하행선의 선로 확보, 스크린도어 설치 등이 완료되어 있으며 주변 인프라로 해운대해수욕장, 벅스코, 해운대구 신청사, 제2센텀, 광안리해수욕장 등이 인접해 있어 충분한 교통수요가 형성될 것입니다.

정차역 선정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을 넘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KTX-이음 열차를 센텀역에

정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텀역, 신해운대역을 교대로 정차-경유 운행하여 동부산권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와 교통난 해소 및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데 해운대구청이 중심이 되어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KTX-이음 열차의 정차역 선정은 각 지역의 미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의 제안과 센텀역 주변 주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KTX-이음 열차 센텀역 정차 촉구와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기대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교통행정과

현황/계획

- 해운대 지역 정차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코레일 등 관계기관 방문
- 열차운영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부산시·코레일과 지속 협의 중



5분 자유발언

이상은 '오고 싶은 도시?' 현실은 '가고 싶은 도시 해운대!'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9.10.)

박지혜 의원(반여1·4동)



발언요지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주거지원정책 필요



저는 부산의 심각한 인구 유출에 관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의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부산의 청년 인구수가 1992년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부산의 15~29세 인구는 49만 9644명으로 그전 달보다 2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3029명으로 같은 기간 부산 전체에서 수도권 순유출 인구의 74.7%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지역 15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24.1%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구조가 붕괴된 것 또한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2020년 이후 부산의 제조업 쇠퇴 및 일자리의 감소, 전국 최하위의 낮은 임금 수준 등이 맞물려 수도권, 창원, 울산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노인과 바다'라는 다소 귀여운 별명마저 얻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취업 기회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해운대에서는 센텀1지구 첨단산업단지과 센텀2지구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주거 단지로 전략하면서 첨단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인구, 경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해운대만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에 맞춘 해양물류, 해양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4차

council.haeundae.go.kr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대기업과 주요 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들의 취업 정책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창업지원 센터를 통해 창업공간 제공 및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과 청년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부산에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청년들에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내몰아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언젠가는 우리 다시 화합하길 희망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일자리경제과

현황/계획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을 통한 창업공간 제공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부산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공간 조성·운영 추진
- 2025년 사업장 임차료지원 사업으로 안정적 청년 창업 환경 조성 예정
-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사업 외 무주택 독립청년 대상 월세지원사업 시행 중



 **5분 자유발언**

**도시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10.7.)

김백철 의원(좌1·3·4동)



발언요지

- 좌동 1360번지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특혜의혹



해운대는 부동산 가치가 아주 높아 개발사업자들 사업의 대표적 도시입니다. 이번 해운대 좌동 1360번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변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말씀드리며 해운대구청의 현명한 대처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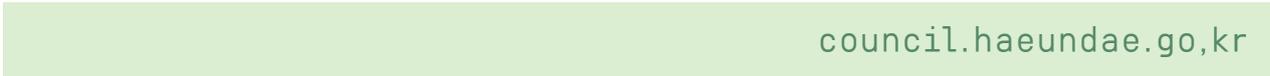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4층 이하의 연립주택용지를 30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변경이며, 여기에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4개 동, 530여 세대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변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고,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 등 주변 주거지역 개발과 연계한 주거 안정에 기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공기여를 통해 그린시티 내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해운대의 발전을 위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주민들의 마음은 도시 환경이 무너지는 해운대그린시티의 훼손과 특혜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공공기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가치 상승분 공공기여액 규모는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 차이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부산광역시는 100%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상 2009년 애초의 토지 가격은 139억 원이며, A회사는 B회사와 공동 지분으로 각각 89억 원씩, 178억 원에 매입합니다. 3년 후 A회사는 B회사의 지분을 17억 원에 매입해 총 261억 원에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11년 뒤, 올해 5월 서류상 1180억 원에 C회사에 매도를 하여 A회사는 919억 원의 차액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다가 919억 원을 번 셈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A회사가 사업을 제안했지만 취하하고 C회사가 다시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평가법인에 토지 상승분을 계산합니다. 종전 1423억 원에서 종후 1622억 원으로 199억 원의 차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올해 3월에 평가한 금액이 1423억 원인데 5월에 매도하면서 1180억 원에 거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애초 A회사가 구입한 261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남기고 빠진 후 토지



council.haeundae.go.kr

상승분은 199억 원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권에 대출한 회사는 A회사 그대로 두고 매매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총 9건의 800여억 원인데 말입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이 거래는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로 나와 있습니다. C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매입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먼저 A회사가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용도 변경에 속도를 안 내고 철회한 후 C회사가 사업 제안을 하니 용도 변경에 속도를 낼까요? 토지 상승분이 199억 원이라며 100% 상회하는 2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꿈수 특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한진CY는 총 2854억 6000만 원의 공공기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억 원의 공공기여 신시가지 열수송관 교체 및 정비는 이 용도로, 주민들이 난방비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을 상의 한 번 없이 부산시에서 난방비 인상으로 사용, 고갈시켜 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 주고 공공기여로 하라며 민간기업에게 돌리는 것은 또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주민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산시와의 특혜 시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결을 같이 하여 지난 8월 26일 국제신문에 의하면 '해운대구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구는 조만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해운대구청은 해소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24년 4월 27일 시행 중이며 공동주택 사업과 같은 각종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운대 그린시티의 조화로운 도시 재설계 계획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느 한 부분만, 특혜 등의 시비가 있음에도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버리면 10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의 새로운 정비 계획은 큰 차질이 생길 것이 명명백백[明明白白]합니다. 해운대구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건축과

현황/계획

-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종합 검토 중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예정



 **5분 자유발언**

**안전한 해운대구를 위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예방 대책 촉구**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10.7.)

나근호 의원(반여1·4동)



발언요지

-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
- 2024. 9. 26. 국회 본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 처벌 강화
- 구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저는 오늘 사회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 시청 행위도 범죄에 포함하여 피해자 회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딥페이크 범죄가 해운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컴퓨터가 합성해 낸 나의 이미지가 음란물로 생성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추산해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중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한국여성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피해자 수는 총 8983명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고 2023년 지원 건수는 총 27만 5520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 생각하며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 운영 및 피해자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등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경찰서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council.haeundae.go.kr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구민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전담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한순간에 뺏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통해 아이들이 웃고 뛰어노는 행복한 해운대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해운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가족복지과

현황/계획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을 위한 상담 강화(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연계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버상담 창구 개설·운영 예정
- 경찰서·교육청 협력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 및 가해자 상담교육 강화
- 구민 대상 신종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



 **5분 자유발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점·사용료 6천억
전액 감면은 과연 정당한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10.7.)

원영숙 의원(우·3동)



발언요지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비가 사업시행자 수익시설에 편중되고 있으며, 부산시의 점·사용료 감면도 전액 감면은 부당함
- 공유수면 점용료가 해운대구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주장할 필요 있음



지난 28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회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부산시에 접수되었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운대구의회는 부산시에 수차례 자료 요청과 담당자 면담을 하였으나 2008년 불변가 기준으로 제시된 총사업비 1410억 원의 산출내역서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위해 마리나항만시설로 준공되었고 현재는 노후화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중 주 사업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업비는 부분적인 개·보수 공사에 국한되며 대부분이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위한 부속 및 부대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르면 부대사업의 시행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부산시는 ‘부대사업은 사용료 인하와는 상관없는 사업이고 점·사용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사용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부산시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취지인 사용료 절감과 시민 편의증진에 맞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더 보장하는 특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초기부터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적격성 검증 결과 ‘제3자 공고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대한 검토 이전에 적격성에 대한

council.haeundae.go.kr

재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되었으나, 부산시는 KDI에서 시 산하기관인 BDI에 적격성 재검증을 맡겨 '적격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받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겠다는 조항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면제해 줄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면제인가'라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부산시는 전액 면제해 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마리나항만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운영 등을 위하여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이미 사회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시설이 조성돼 있어 부분적인 개·보수를 하는 데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부대 및 부속시설을 위한 투자금이며, 7개 회사가 공동출자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직접

사업비를 들여 재개발하여 준공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대신 30년간 사업비를 회수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입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재개발사업이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영리사업이라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이 정당할 것이지만, 이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부속시설에 투입되어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와 이익을 보장하는 영리사업이므로 점·사용료 전액 감면은 부당하며, 주무관청인 부산시에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연간 203억 원, 30년간 6000억 원 이상의 세수는 해운대구가 주민 복지를 위해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재원으로 실시협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김성수 구청장 및 관련 부서에서는 이 세원이 반드시 구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의견

해양진흥과

현황/계획

- 공유수면 감면 조항 관련 법령해석·자문 결과, 요트경기장은 감면 제외대상 아님
- 공유수면 점·사용료 확보는 어려우나 점용료 상당의 사업·혜택 반영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 예정



 **5분 자유발언**

광안리에는 드론 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10.7.)

김미희 의원(비례대표)



발언요지

- 해운대해수욕장 편의시설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개선이 필요함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911만 70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곧 해운대해수욕장이 피서객 1000만 시대를 다시 맞이하여 명성에 어울리는 활력을 되찾으리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방문객 증가라는 긍정 지표에 가려 보이지 않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실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먼저 보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있는 인도입니다. 모래가 버석버석 밟힙니다. 백사장에서 묻은 모래를 씻기 위해 관광객들이 맨발로 인도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편리하지 않습니다. 백사장 계단 앞에서 미리 발을 씻고 올라온다면 씻은 발로 다시 모래를 밟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백사장 규모에 비해 세족장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한 번 씻어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들 손을 잡고 이끌고 빈자리를 찾아 눈치를 보며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인 양빈 작업 결과 지금의 해운대 백사장이 복원되었습니다. 모래 유출을 막기 위해 신발을 신고 백사장을 걷는 분들을 위한 그레이팅(grating) 시설도 계단 초입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수욕장에서 구남로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옆 신호등입니다. 시민의식에 호소하기만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달라는 말은 쓰레기통을 편리한 곳에 설치한 후에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면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다고 각종 언론이 주목하는 광안리해수욕장은 어떨까요? 세족시설이 인도와 해수욕장 경계에 있습니다. 발을 완전히 씻은 상태에서 개운하게 인도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샤워시설도 백사장 출입 라인에 있어서 동선과 환경 미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물 한 바가지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시설 덕분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은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폐쇄형 유료 샤워시설에서는

council.haeundae.go.kr

비누, 샴푸를 쓰기 마련이지만 노출형 무료 샤워시설은 친환경적입니다.

휴지통도 필요한 곳에 알맞은 크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사이에 쓰레기를 슬쩍 끼워 버리며 양심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개장 시에도 작은 배려와 적재적소[適材適所]로 알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 밀락더마켓, 드론쇼 등을 중심으로 입소문까지 퍼져 광안리해수욕장은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여름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개장 첫 주 방문객 수는 한때 광안리가 해운대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 역시 해운대가 광안리는 물론 세계 어느 해수욕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 해변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명성에 기대기보다는 냉정한 시각으로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족장, 샤워장, 쓰레기통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해운대는 관리자 중심이고, 광안리는 이용자 중심입니다.

온천족욕장, 송림공원, 동백섬 등 광안리가 가지지 못한 해운대만의 장소, 시설은 잘 관리하되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기준으로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재점검하기를 촉구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미래 세대에 남겨줄 자연유산임을 인지하고 세계 최고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관광시설
관리사업소**

현황/계획

-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세족시설 부족은 송림공원 내 세족장 3개소 추가 설치로 해소 가능하며 필요 시 확충 검토
- 쓰레기통 설치 예산 등 종합 검토 필요, 현 인력을 통한 지속적 환경정비 추진 예정



 **5분 자유발언**

**마린시티 수중방파제
(이안제) 건립, 신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10.11.)

최명진 의원(우2·3동)



발언요지

- 부산시가 채택한 하부구조물 설치 방식에 대한 우려
- 동백섬 훼손과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얼마 전 제18호 태풍 크라톤(KRATHON)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저는 태풍 북상 관련 기사를 보면 마린시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혹시 2016년 태풍 차바(CHABA)때 입은 피해가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는 마린시티 일대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린시티 전체 면적 35만 m² 중 16만 m²가 침수됐고 상가 25곳, 차량 80여 대가 파손되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표면만 정비했을 뿐 아직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 개선 위험지구로 지정되고도 사업 추진방향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되었던 개선방안은 길이 650m 방파제를 짓고 호안을 매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며 경제성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기립식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지만 이 또한 유지 보수 비용 문제로 좌초되었습니다.

그동안 콩레이(KONG-REY), 마이삭(MAYSACK), 힌남노(HINNAMNOR), 난마돌(Nanmadol), 카눈(Khanun) 등 많은 태풍이 지나갔고 그때마다 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며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된 안은 이안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린시티 연안에서 150m 떨어진 해상에서 길이 500m, 높이 14m 규모의 테트라포드(tetrapod)를 쌓은 인공벽을 설치해 파도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놓고 본다면 호안을 매립하고 방파제를 세우는 초기안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오랜 과정 끝에 채택된 차선책인 만큼 아직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공법의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채택한 하부구조물

council.haeundae.go.kr

설치 방식인 심층 혼합처리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바닷속 토양에다 평균 약 4m 간격으로 1000여 개의 기둥을 박은 뒤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물질을 주입해 하부구조물을 만들어 테트라포드를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법은 시공 후 품질 확인이 어렵고 파도와 조류에 의해 형상을 유지하기 어려워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 설치된 테트라포드는 직접적인 청소가 불가능하므로 향후 테트라포드에 쌓일 수 있는 쓰레기를 관리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동백섬 부두를 활용한다는 방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백섬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8년을 지나며 이제 겨우 몇 걸음 디뎠습니다. 차선책이 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안정성 확보와 환경파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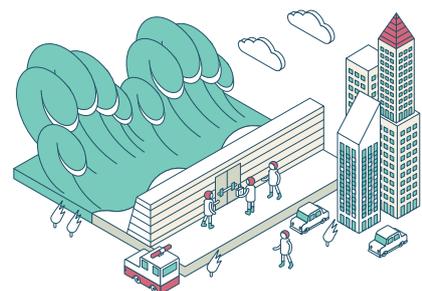
어렵게 내디딘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더 이상 안전 문제로 마음 졸이지 않도록 해운대구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재난안전과

현황/계획

- 하부 기초보강 우려사항을 부산시에 전달하고 검토 요청
- 동백섬 훼손 방지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해양환경조사 실시 예정





5분 자유발언

달맞이언덕과 청사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10.11.)

최은영 의원(중2,좌2,송정동)



발언요지

- 달맞이언덕과 청사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대책 마련



우리 해운대구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간 연안정비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U' 자형으로 확장하였고, 달맞이 해월정 아래쪽 해안에 해월전망대를 개장하여 벌써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지점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의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은 미포~청사포~송정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관광상품이며 올해 이용자 수만 해도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접근성은 매우 열악합니다. 청사포와 달맞이언덕에 가는 대중교통수단은 마을버스인데 그마저 운행대수도 적고, 배차시간도 긴데다 버스정보시스템(BIS)조차 없는 곳이 많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 [茶飯事]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 1순위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달맞이언덕 해월정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면도로 주택가 정류장에 내려서 물어물어 생소한 길을

한참 걸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가 환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청사포를 향하는 초입에서는 차도를 점령한 관광버스 주차 행렬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변변한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다 보니 해운대구가 편도 2차선인 도로의 반을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 관광버스들은 청사포에 관광객을 하차한 후 위험천만한 불법 유턴을 합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대중교통수단도, 관광버스의 주차공간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교통정책과 주차현황은 언제 적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광수요는 저만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과거에서 비틀대고 있습니다. 확연한 상황적 변경이 일어났으면 적극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임을 이제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대중교통사각지대인 청사포, 달맞이언덕에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합니다. 최근 부산시는 일부

council.haeundae.go.kr

지자체에 타바라(TABARA)라는 이름의 수요응답형 맞춤형 버스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타바라는 버스 승객들이 호출하면 달려오는 차량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똑버스, 창원시의 누비다, 용인시의 타바용, 세종시의 두루타 등 이미 검증된 대중교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앱(App)으로 호출하면 단 몇 분 만에 15인승 차량이 도착하는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로, 택시처럼 원하는 시간에 타면서도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다 보니 무척 반응이 좋습니다.

둘째,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회차지점 개선을 촉구합니다. 10여 대의 관광버스가 차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해운대구의 주차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와 협의하여 주차불편이 적은 부지에 버스정류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명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유턴을 방관하지 말고 단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관광지를 만끽할 수 있는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대형버스를 제법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그곳까지 다시 걸어가서 승하차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도입에 대해 부산시와 적극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시내버스 노선 하나 없는 청사포를...

과연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 등을 통해 수요를 예측·확인하고 적용하는 해운대구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의 다른 구에 비해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으로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적잖게 들립니다.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뿐 아니라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親)관광객 중심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교통행정과

현황/계획

- 청사포를 시점으로 해운대구 7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
- 부산시에 해당사항 지속 건의·협의 추진





5분 자유발언

해운대 동백섬, 대나무군락지로 인한 수목고사와 관리부실 이대로 괜찮나?

제2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4.11.8.)

원영숙 의원(우2·3동)



발언요지

- 해운대 동백섬의 대나무 확산과 수목 고사에 대한 해결·관리방안 마련 촉구



해운대 동백섬은 부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사계절 내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동백섬의 해안길을 따라 걸으면 울창한 동백나무숲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며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시원한 바다 전망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동백나무의 붉은 꽃이 피어나는 겨울이면 더욱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관을 선사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소중한 동백섬이 현재 관리 부실로 인해 그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은 약 14만 6350㎡의 넓은 관리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비치호텔 맞은편 셋길에서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관리 소홀로 대나무 군락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나무는 뿌리로 왕성하게 번식하여 이 일대가 어느새 대나무숲으로 약 9000㎡ 이상 분포·확산 되어 해송과 같은 주요 수목이 햇빛과 영양을 받지 못해

고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인 해운대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일시적인 가지치기 작업만을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구민들 사이에서 '동백섬이 곧 죽도가 되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른 대나무가 빼곡히 숲을 이루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금도 해송 등 수목들이 도태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동백섬 내 주요 수목은 동백나무를 포함해 26종 2만 3249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5년 전 의회에서 동백나무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백나무는 1만 879주로 확인되었으나 동백나무 외 해송과 철쭉 등 다른 수목들의 개체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1만 2370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확산된 대나무 군락지로 인해 해송과 같은 주요 수목들이 고사하고 동백섬의 생태적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동백섬의 수목 관리는 여전히 26종 2만 3249주로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council.haeundae.go.kr

해운대 동백섬은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섬은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이기에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조속히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운대 동백섬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관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인 수목 관리와 시설을 유지만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산광역시 자연유산인 해운대 동백섬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관리·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리주체인 우리 구는 해운대 동백섬이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관리·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대나무의 확산과 해송의 고사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동백섬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인 해운대 동백섬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 검토의견

**관광시설
관리사업소**

현황/계획

- 다른 수목의 생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나무 뿌리 정비 등 실시
- 필요 시 동백공원 내 수목전수조사 실시하여 수목 현황 관리 예정



 **5분 자유발언**

**편리한 데크
지속적인 관리**

제2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11.22.)

박기훈 의원(재송1동)



발언요지

- 해운대구 전체 데크 점검·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요청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부산에 설치된 데크길 총 526곳, 길이 96km에 대한 공공보행물 관리실태 특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0곳 중 8곳 꼴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데크길은 산책로, 산림, 공원, 해안가 등 자연과 접하는 야외공간에 목재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길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난간재 파손 519건 등 1594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부산에 설치된 데크길 526곳 중 93곳, 17.7%만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었고 나머지 433곳, 82.3%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특히, 등산로에 설치된 135곳의 데크길 중 131곳, 97%가 정기 점검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가 지적받은 공공보행 데크길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대구는 늘푸른과 30개소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5개소의 현황 이지만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많은 데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면 부식 10건, 파손 6건 등 60건의 부적합 건수가 지적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숲길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실태조사에서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도 없고 데크 시설물 점검사항도 매년 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파손부에 대한 교체나 보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산책로 데크 구조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데크 설치 전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등 전 단계에 자문위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단계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의 상황을 보면 데크 전체에 대한 라벨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크 현황표를 만들어 각 읍면으로 분리하고 시설명과 관리자명, 준공일과 사업비 등을 명시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정말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council.haeundae.go.kr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체 데크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을 하면서 민원접수 시에 보수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총원하여 각 동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편리하고 안전한 해운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서 검토의견

**관광시설
관리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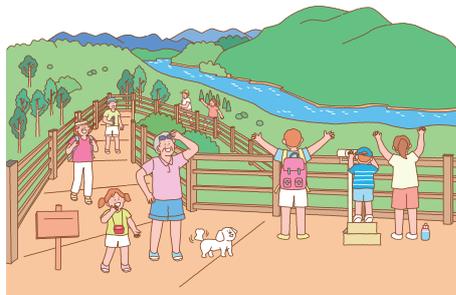
현황/계획

- 동백공원 해안산책로 정비사업으로 데크 전면 재정비 완료
- 연4회 이상 특구공원 내 데크길 등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늘푸른과

현황/계획

- 데크길 부적정 현황을 조사해 일부는 보수 완료, 미처리 건은 추가 조치 예정
- 매년 데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 예정



 **5분 자유발언**

**해운대도서관!
'구립'인가 '시립'인가**

제2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11.22.)

최은영 의원(중2,좌2,송정동)



발언요지

- 해운대도서관의 구립·시립 여부를 명확히 해 명칭과 예산 부담 주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해운대도서관의 향후 운영 계획과 현실적 방안 마련 필요



저는 좌동에 있는 해운대 대표 도서관인 구립 해운대도서관의 모호한 정체성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대도서관 입구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도서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도서관에는 도서 대여를 하면 책 표지에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이라고 찍혀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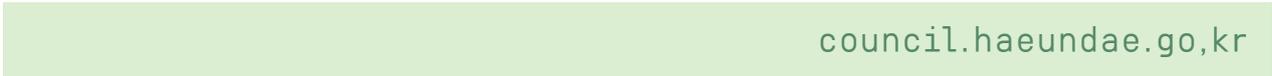
인터넷에서 해운대도서관을 치면 '부산광역시립해운대 도서관'이라고 자동 검색이 되고 이에 따라서 접속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도서관'으로 나옵니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해운대도서관이 부산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표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해운대도서관은 없습니다. 구립 도서관이 아니라는 겁니까? 대체 해운대도서관은 구립입니까, 시립입니까? 궁금합니다.

우리 구 재산이라면 당연히 모든 표기에서 '해운대구립 도서관'으로 통일해야 하고, 시립이라면 매년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을 해운대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는지요?

그러면 해운대도서관의 역사와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동 분관은 1981년 부산직할시 조례 157호에 의거 시립해운대도서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그후 2010년 좌동 신시가지 1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운대도서관 본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부지에 해운대도서관 운영주식회사가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건축하고 우리 구는 20년간 임대료 등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구가 부담한 임대료,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합산하면 약 170억 원입니다. 앞으로 5년간 부담할 임대료



등도 약 70억 원 이상입니다.

부산에 있는 12개의 시립도서관 중 어느 곳도 구비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해운대도서관만 시립도서관의 무늬를 유지하면서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유일한 도서관입니다.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운대도서관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부산시교육청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까? 근거도, 절차도 매우 부족합니다.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해야 합니다. 해당 협약서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했다는데, 부산시교육청이 사업시행자입니까?

구립 도서관은 두 가지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을 위·수탁할 수 있고 그 한 가지가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운대도서관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조례로는 위탁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준한 공공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해운대구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문제입니다. 구청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해운대구는 향후 해운대도서관 운영 계획과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운대도서관은 1일 이용자 수가 2500명에 달하며, 규모가 부산에서 3위, 전국 교육청 직속 도서관 중에서도 12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도서관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을 보더라도 29명이며, 이를 포함한 연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와 같은 인력과 예산을 감안해 보면 5년 뒤 해운대구가 현실적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규모상, 예산상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척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부산시와 협의해서 5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구비가 절감되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된다면 절감 예산으로 각 동의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부터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해운대도서관은 구민의 삶의 중요한 문화시설이며, 그 운영 방식은 투명해야 하고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은 사용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구청은 하루빨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교육도서관과

현황/계획

- 2030년 계약만료 전까지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최적 운영·관리 방안 검토 예정



5분 자유발언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촉구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2.11.)

송민우 의원(반송1·2동)



발언요지

- 빈집 문제와 관리 실태 점검, 제도 개선 및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촉구



오늘 본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관·경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이 주택가 사이에 생기면서 거동 수상자 출입, 청소년 비행, 쓰레기 투기, 화재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폐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한진CY 부지 내의 폐가로 1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불은 폐가 전체를 태우고 인근 유리공장 창고 일부를 태운 뒤 화재 발생 44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2022년 기준 소규모 빈집정보알림e, 빈집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안에서는 반송동이 가장 많은 빈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공공기관, 경찰 등과 분기별 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민·관·경이 함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둘째,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의 착한텃밭 조성, 인천의 빈집은행 등과 같은 민·관 협력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관리과, 창조도시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재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council.haeundae.go.kr

셋째, 해당 부서의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유휴자산이 될 수도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흉물이 아닌 '살고 싶은 해운대, 오고 싶은 반송'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부서 검토의견

건축과

현황/계획

- 빈집 대상지 소유자 파악 후 정비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하여 사업 참여 유도
- 필요 시 민·관·경 회의 개최로 빈집문제 적극 해결 예정





5분 자유발언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2.11.)

이상곤 의원(재송1동)



발언요지

- 경기 침체와 소비 변화로 골목 상권 공실이 메인 상권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해운대구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



요즘 해운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임대'라고 붙여놓은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산일보의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의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보다 높고, 서울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목 귀퉁이에서 시작된 상가 공실이 불경기와 물가 상승,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도미노처럼 메인 상권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인 소상공인의 폐업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불황으로 지역 내 소득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아 지역 순환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역 경제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로컬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달리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과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조사한 각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037억 원을 투입하여 배달·택배비 한정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 남구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착한 소비 선결제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와 파주시, 전북 익산시와 강원 동해시에서는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 장흥군과 함평군에서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홍보 마케팅 지원을, 전북 완주군에서는 경영 자금 지원을,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소상공인 세무 신고 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council.haeundae.go.kr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특히 '눈물은 못 닦아드려도 대신 에어컨은 닦아드립니다.'의 지원 사업을 하는 서울 노원구와 부산 남구의 에어컨 세척 사업은 사업장의 에어컨 세척과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경비 부담 완화는 물론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저희 관광 해운대구에 안성맞춤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정읍시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착한 선결제 사업은 고객이 미리 결제한 뒤, 추후에 방문해 소비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득증대를 돕는 착한 소비 운동입니다. 특별히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착한 선결제 사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해운대구도 해운대구에 걸맞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일자리경제과

현황/계획

- 해운대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출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진
-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발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



 **5분 자유발언**

**마린시티 초고층 업무시설,
실버타운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어디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2.11.)

원영숙 의원(우2·3동)



발언요지

- 초고층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미이행
-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에 의문 제기



저는 오늘 글로벌 도시 해운대구의 상징인 마린시티에 초고층 업무시설과 실버타운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무시된 채 졸속 처리된 인허가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교통 체증, 싱크홀 사고 발생 우려, 교육 환경 악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의 졸속 진행으로 인한 교통마비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린시티 지역은 평일 기준 교통량이 2300여 대로 이미 혼잡한 상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층 업무시설과 실버타운이 완공되면 하루 교통량이 2만 2000여 대로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2개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따로 진행되었고, 교통 유발량 추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신호 체계 보완, 보도 정비, CCTV 설치 등 사소한 보완만으로 개발이 강행된다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제니스와 홈플러스 사이 2개 차선은 25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로 변경되었는데 이 구간은 유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도 확보가 필요한데도 단지 50cm만 도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실한 지하안전평가로 인한 재난 위험입니다. 마린시티는 수영만 매립지로 연약지반에 지하 8층까지 계획된 공사로 주민들은 심각한 안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99%의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과 지반 침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지하안전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전에 관한 증거를 요청했지만 시행사로부터 안전하다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불안감 해소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이 강행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council.haeundae.go.kr

아이들의 교육 환경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와 20여 미터 거리에 초고층 실버타운의 건립이 현실화된다면 지금도 학교는 3면이 초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4면이 초고층 건물로 막히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빌딩풍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낙하물 사고, 공사 트럭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아이들의 안전은 개발이익의 뒷전으로 내몰린 실정입니다.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임시 모듈러(modular) 교실과 3부제 급식을 가질 만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가능한 노인 주거시설인 실버타운 개발은 학령인구 전입 악용과 공동주택으로 편법적 용도변경 등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햇볕 한 줌도 들지

않는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과연 이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해운대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약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통마비, 싱크홀과 지반 침하, 교육 환경 악화 문제가 현실이 된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해운대구의회는 어디에 숨어 있었으며, 해운대구청은 도대체 주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지금도 마린시티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부서 검토의견

건축과

현황/계획

- 부산시에서 초고층건축물 심의·평가 전반 담당. 민원사항 이송 처리



5분 자유발언

해운대구청은 의회의 권한과 의정활동을 침해하지 말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2.11.)

최은영 의원(중2,좌2,송정동)



발언요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 구의원 제척은 의정활동 권한 침해임



해운대구의회와 구의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고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을 이 자리에서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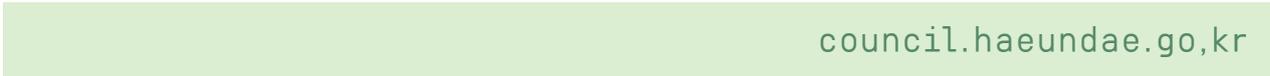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집단민원 현안인 좌동 1360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전례 없이 심의위원인 구의원들의 참석을 봉쇄하는 제척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청은 구의회가 특정 안건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구의원은 이해관계인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갖다 댔습니다. 의회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대변하여 공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본연의 의정 활동이며, 특히 해당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 없이 채택한 의결 사항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무엇입니까? 본인, 배우자 등과 경제적 이익·불이익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의원이 이해관계인입니까? 의회가 이해관계인 집단입니까?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 그리고 의회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구의원들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는 구청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은 참으로 기가 차며, 이마저도 회의 하루 전날 오후에서야 공문으로 제척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해당 구의원들도 부당한 제척에 대한 검토,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즉각 공문으로 심의 연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부위원장인 안전도시국장이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2월 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청 산하 공무원인 두 분의 예정된 퇴직이 민감한 우리 지역 현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해당 안건의 심사 기한은 2025년 1월 19일로 그 당시 한 달이나 남아있었기에 긴박하게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었으며 민감한 지역 현안이라 오히려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council.haeundae.go.kr

구의원들의 연기 요청과 주민들의 반발 집회 그리고 언론의 취재에도 회의는 무리하게 강행되었고 회의 당일 관련 조례에 근거도 없는 참석위원들의 현장투표로써 구의원들을 회의장에서 쫓아내고 보란 듯이 조건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해운대구청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신만 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당하게 제척 당한 해당 의원들은 즉각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의회는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 질의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의회 고문변호사도 제척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구청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도 사과 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훼손한 부끄러운 사례를 우리 해운대구청이 자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어떤 결의안이든 채택할 경우 그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위촉 구의원들을 제척으로 원천

봉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 후 여러 언론들도 앞다투어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공공성을 담보로 정책을 심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성을 상당히 저해하며 해운대구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나 다르지 않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나갈 것이며 해운대구민의 권리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운대구청은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월권행위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잘못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건설과

현황/계획

- 심의안건의 이해관계 및 전후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

 **5분 자유발언**

**'총체적 난국'
해운대 빗축제,
이대로 가면 안된다!**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2.17.)

심윤정 의원(우1동,중1동)



발언요지

- 제안서 평가의 정성평가 세분화·비율 조정 및 부실 업체 입찰 제한 장치 마련 필요
- 축제 예산의 본예산 반영과 주민·상인·전문가 의견의 균형 있는 수렴 필요



‘해안가 빗축제엔 다 고래 조형물?, 어떻게 선정됐나’, “정량평가 최하점인데” 해운대 빗축제 업체 선정도 논란, ‘해운대 빗축제 뚜껑 여니 “빛이 없다”’, ‘개막한 지 닷새째 공사 중, 빛없는 17억짜리 빗축제?’

“17억 투입했는데...” 지자체·상인 갈등으로 번진 해운대 빗축제, ‘부산 16개 지자체 중 9곳이 빗축제... “다 거기서 거기” 논란’... 최근 보도된 주요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이처럼 언론조차 해운대 빗축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해운대 빗축제 사업비는 협찬을 제외하고도 1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미숙한 행정과 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축제의 완성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2023년 세종시 빗축제를 했던 업체로 아시는 것처럼 당시 부실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해운대 빗축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부실 운영

전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대포장된 그 몇십 분 만의 P/T 발표만으로 선정되는 현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주 반딧불축제처럼 정성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정량·정성평가의 비율도 조정해야 합니다. 업체는 점등식에 맞춰 조형물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설치물도 애초의 계획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해운대만의 특색을 살려야 할 빗축제에 2024년 3월 대전 대덕물빛 축제에서 사용한 고래와 조형물을 그대로 가져와 재활용 까지 했습니다.

의회가 일부 삭감한 카운트다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이 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부서에 제가 세부사업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의 답변은 좀 황당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업체에서 하는 거라 저희는 모른다’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운대 빗축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모든 행사를 업체에 통째로 맡긴

council.haeundae.go.kr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축제 기간 중 설계 변경도 구두로만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운대구는 계약서 내에 과업 지시 및 특약사항에 따라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제7조 손해배상, 이 모든 조항을 활용해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부산의 10개 구가 빛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한 업체가 여러 지역의 축제를 수주하면서 특색 없는 봉어빵식

운영, 재탕, 삼탕되는 조형물, 차별화 없는 콘텐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운대다운, 해운대만의 특색있는 빛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저한 축제의 준비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빛축제 예산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주민·상인·전문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십시오.

업체 선정 시 정성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부실 운영업체의 입찰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끝으로 해운대 빛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거듭 나기를 희망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과

현황/계획

- 배점 비중은 동일 유지, 우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검토 예정
- 해운대빛축제 예산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추진
- 축제 준비 시 주민·상인·전문가 의견 반영 예정



 **5분 자유발언**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2.17.)

이상곤 의원(재송1동)



발언요지

- 공공시설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방식 개선 필요



최근 방송을 통하여 화재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 공공시설물의 전기와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기와 소방안전 관리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소방설비의 고장이나 사고는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작업은 전문 업체의 안전 관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수행되어 안전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1년에 24개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전기에 약 8500만 원, 소방에 약 6000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히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정확한 기준과 계약 체결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24곳 모두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전기 8개 업체, 소방 9개 업체가 이곳저곳 분산 계약하고 있으며, 전기는 특히 작년 2024년 한 업체가 14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설은 5년간 3개 업체가 번갈아가며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약 일자도 몇 곳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센터 소방 계약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계약일은 2020년은 1월 30일, 2021년은 1월 22일, 2022년은 2월 17일, 2023년은 2월 1일, 2024년은 1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내내 사후 계약이 이해가 됩니까? 같은 업체도 아니고 중간에 변경을 하였음에도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계약 금액도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는 설비의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서비스의 범위, 점검 빈도, 설비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수수료 표는 전기안전공사 기준이며,

council.haeundae.go.kr

업체는 일반적으로 안전공사 기준 70~80%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관리 업체 8곳, 소방관리 업체 9곳 모두 부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지만 신기하게도 해운대 업체는 17군데 중에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물별로 제각각 돼 있는 계약을 몇 개의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투명한 입찰경쟁을 통해 계약 금액의 적절성, 계약 일자의 혼란성을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의 선정으로 더욱 안전한 해운대구의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리 기간도 매년 계약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해도도 높아지고 안전 관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업체 발굴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재무과

현황/계획

- 공공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계약방식 개선 검토
- 각 동 의견 수렴 후 방침 결정 및 계약 의뢰 예정





5분 자유발언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부산의 미래인가, 특혜의 시작인가?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2.17.)

원영숙 의원(우2·3동)



발언요지

- 보전비용의 명확한 산정과 구체적 대안 마련, 사업 절차의 투명한 공개 필요
-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 청취·반영 절차 마련 필요



우리 의회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화 시행을 위해 결의안 및 5분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30년간 전액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추진되었고, 주민들과 해운대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산시와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실시에 앞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해운대구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구가 요구하는 보전사업(안)과 관련한 보전비용의 명확한 산정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로 인해 30년간 약 600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는

해운대구가 요구하는 보전사업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운대구는 부산시에 요구한 보전사업의 종합의견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사회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특혜 의혹과 교통대란, 학습권 침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셋째, 사업 부지 내 문화센터 건립과 도로 확충 등 지역 편의시설 확충을 고려한 개선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을 통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세계적 수준의 해양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council.haeundae.go.kr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과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이러한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부산은행 등 건설한 제1금융권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된 실시협약은 사모펀드가 50%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세전 실질수익률 5.72%를 보전해 주고, 이후 발생한 초과 이익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각각 25%씩, 사업시행자가 50% 배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며, 시행사는 완공 후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해운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때만이 지역사회와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범사례가 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해양진흥과

- 현황/계획**
- 구민 문화생활증진을 위한 시설 반영을 목표로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상 예정
 - 부산시에서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5분 자유발언**

**해운대의 랜드마크,
바다도서관 건립 촉구**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2.17.)

최명진 의원(우2·3동)



발언요지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운대구가 바다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 약속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현재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연간 203억 원, 30년간 총 6000억 원이 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애초 부산시가 점·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이유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협약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상업시설 면적이 기존 9504m²에서 2만 5666m²로 대폭 증가했고, 더는 이를 공익사업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 불편, 공기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최소 2년간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조차 내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특정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공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청이 나서 바다도서관 건립 등 공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바다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첫째, 해양을 테마로 한 공공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 해운대구에 실질적인 해양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 해양도시인 호주 멜버른은 바다를 한눈에 담은 도서관으로 관광객에는 유명 관광지로, 워케이션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에게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다대도서관을 보아도 바다를 담은 도서관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바다도서관이 바다 전경과 요트 교육,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VR 해양 탐사 체험,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 등을 제공한다면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둘째, 해운대구는 높은 인구밀도와 부족한 도서관 수로 인해 도서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우동은 해운대구 인구의 22%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council.haeundae.go.kr

우동 지역 내 학생들과 주민들은 도서관 이용을 위해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어릴 적부터의 도서 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부재는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다도서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은 독서와 학습을 위한 환경을 제공받고, 성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지난 10일, 구청장님과 함께 한 동순방에서 주민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자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는 바다도서관 건립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과밀학급이 많은 우3동 내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컴퓨터자 배움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구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다도서관을 통해 구민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지식을 쌓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방문객에게는 해운대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통한 단순한 사업 혜택이 아닌 구민을 위한 공공기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

교육도서관과

현황/계획

- 다각적인 방향으로 부산시와 협의 중





5분 자유발언

반여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촉구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2.17.)

나근호 의원(반여1·4동)



발언요지

- 반여로의 도로 여건 및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오늘 해운대구 반여1동에 위치한 반여로의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출퇴근 및 아이들의 등하교 시 보행자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 여건과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40분경 해운대구 반여동 1535-19번지 건물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 어르신이 우회전을 하던 5t 트럭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우리 구청은 어떤 대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9개월이 지나고 있고, 최근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로 수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건설과에서 반여로 왕자맨션 교차로에서 센텀KCC스위첸 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운대구 주민, 특히 반여동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로명 반여로는 2008년 이전 보도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부터 KCC아파트 방향으로의 사람 한 명이 걸어 다니기조차 힘든 인도 폭을 가지고 있고, 중간중간 통신주, 전신주, 보안등이 있어 보행자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시설 기준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여로의 보도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보도의 폭이 1.5m 이상으로 보이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인도폭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으나 해운대구청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지금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3년 재차 민원이 제기된 후 김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매번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council.haeundae.go.kr

이처럼 늘 소통과 관심을 가진다면 변화하고 하나하나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반여동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해운대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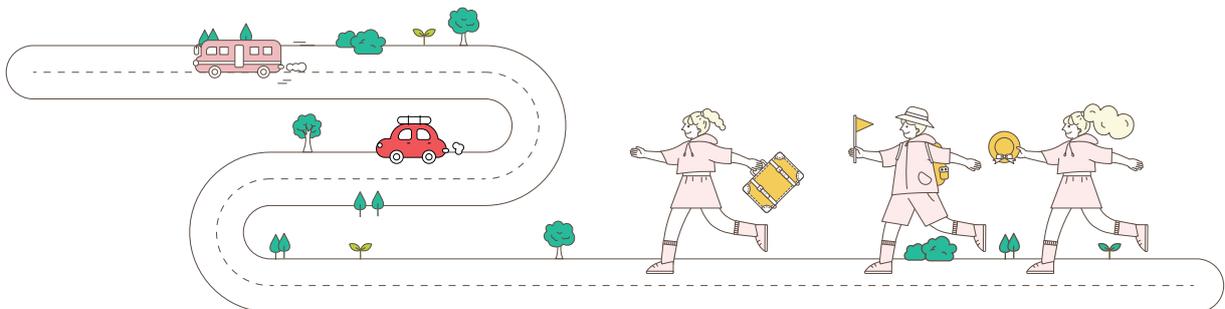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안전에 대한 투자이며, 의무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안전한 해운대구, 가장 편안한 반여동,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구를 기대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건설과

현황/계획

- 대책강구 및 유관부서와 실무협의 진행



 **5분 자유발언**

헌법을 국민에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4.22.)

김미희 의원(비례대표)



발언요지

- 출생 가정에 헌법책을 증정해 아이와 가정의 존엄성과 가치 전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불법 내란 사태와 그 이후의 뻘뻘하고 참담한 국민 기만의 과정 그 어디에도 헌법정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25년 오늘 이 헌법 전문의 정신을 단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바로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han지를 축약하는 한마디일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독재 정권은 지방정치의 핵심인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26년이 지나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개정된 헌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조항은 변함없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의 지방의회를 구성한 첫 선거는 1995년에 비로소 실시되었습니다. 폭력적 강제 해산 후 전국민적 항쟁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지 못했던 지방의회는 결국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13일 간 단식투쟁의 결과로 쟁취되었습니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만 무려 34년의 세월과 투쟁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헌법 자체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세력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이 헌법과 가까워질수록 정치권력은 헌법정신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을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council.haeundae.go.kr

첫째, 해운대구의회에서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합니다. 거창한 담론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헌법」에서는 제117조, 제118조, 단 두 조문에만 나와 있고 내용도 빈약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국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총 10장, 130조에 걸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헌법의 가치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따라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헌법책을 증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의 가정에

대한국민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 제1호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23일간 우리 국민은 차가운 길거리와 광장을 응원봉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저와 우리 구의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대한민국 국민과 해운대 구민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민원어권과

현황/계획

- 출생신고 후속조치 안내문에 헌법 전문 열람 QR코드 포함 예정



5분 자유발언

장애인 전동 휠체어: 도로운행, 누구의 잘못인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5.2.)

송민우 의원(반송1·2동)



발언요지

- 반송동 보행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요구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3.8%가 최근 5년간 실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76.3%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차도를 이용한 원인으로는 장애물, 경사로, 불법주차 등으로 보도 이용이 제한되어서라는 답변이 6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전동 보조 기기 사용이 위험할뿐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운대구 전동 보조 기기 신청 현황은 2022년 57건 중 반송2동이 36건, 2023년 48건 중 반송2동이 31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56건 중에 반송2동이 34건으로 반송2동이 해운대구의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의거하여 보행 보조용 의차는 수동식·전동식 휠체어, 전동식 스쿠터, 특수 휠체어

등을 말하며 전동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도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도 곳곳의 나무, 전봇대, 통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는 직선 주행이 어렵고 지그재그로 우회하여야 하며 인도 폭이 협소한 구간도 많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까지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 공간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들이 보도가 아닌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역주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휠체어 등은 돌발상황에 즉각 반응하기 힘들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송2동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council.haeundae.go.kr

요청드립니다. 반송동 전역에는 보행환경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구간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뒷반송로 느티나무도서관 일원 보도정비 사업을 통해 벚나무 8주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인도 폭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도로정비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관련 부서, 지역구 의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해운대구민과 반송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교통행정과

현황/계획

- 재반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중
- 반송동 등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도 추진 예정



5분 자유발언

스마트 경로당: 노인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다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5.2.)

나근호 의원(반여1·4동)



발언요지

- 고령화 시대, 어르신 디지털 소외 방지를 위한 스마트경로당 사업 추진



본 의원은 기존 경로당이 단순한 친목 공간을 넘어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디지털 소통을 지원하는 다목적 복지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고민합니다.

해운대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 4252명에 달하며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2021년 대전 유성구,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국내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에 신청한 곳은 부산시 단 한 곳뿐이며, 현재 부산 지역 16개 구·군 중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매우 큼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에 혈압, 혈당, 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기기를 배치하여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료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나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자기개발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셋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로당 내에 CCTV 및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 센서를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council.haeundae.go.kr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입니다.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적인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관련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스마트 경로당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모든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 검토의견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황/계획

- 관내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스마트 경로당 구축수행계획 수립
- 부산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모 확정 시, 구비 확보 후 시범 경로당 선정 추진 예정



 **5분 자유발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5.2.)

이상곤 의원(재송1동)



발언요지

-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해 해운대구에 평생교육센터 설립 필요



최근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부모, 장애인 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와 함께 금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방문 후 소감은 ‘금정구가 부럽다.’, ‘이사 가고 싶다.’, ‘해운대구는 뭐 하노?’로 축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권리로 이해되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차단되어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 지정 위탁 기관으로서 18세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직업 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전국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8군데, 평생교육시설

103군데가 있는데 서울에는 25개 구 전체에, 부산에는 금정구에 평생교육센터 1군데, 수영구에 평생교육센터 1군데만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해운대구에는 2025년 3월 기준 장애인이 1만 7254명이 있으며, 그중 발달장애인 유형에 속하는 지적장애인이 1219명, 자폐성 장애인은 368명으로서 발달장애인은 1587명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장애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에 1만 7395명에서 올해 1만 7254명으로 14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1547명에서 1년 사이에 40명이 증가한 1587명입니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지금 114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돌봄의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지만 자료에서 처럼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는

council.haeundae.go.kr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당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2023년 5월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조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2024년 9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성과는 이용자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정서적 안녕 증진, 사회성 증진과 도전적 행동 감소를 가져왔고, 가족 차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가족 갈등 감소 및 화목한 관계 증진, 미래에 대한 희망 발견을, 기관 차원에서는 지역거점센터로서의 위상 확립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기능 유지 및 향상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립은 해운대구의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가족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노인장애인 복지과

현황/계획

-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초기 자본과 지속 운영비가 필요
- 부산시 차원의 기준·지침 마련 후 사업 추진 필요



 **5분 자유발언**

**무분별한 개발,
해운대구민 의견 반영
필요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5.2.)

최명진 의원(우2·3동)



발언요지

- 난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재설계를 위한 초고층 건물 조망권·경관 기준 마련 등 요구



해운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관광지이며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징적인 도시가 초고층 건물 난개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찢기고 바다를 향한 시선은 콘크리트에 막히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명품 관광 도시가 아닌 초호화 주택단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 아닌 일부 고소득층의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운대의 하늘과 바다는 누구나의 자산이 아닌 돈이 있는 자만의 특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던 곳에 이익만 좇는 개발과 이를 방조하는 행정이 도시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건축 조례와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는 형식에 불과하며 기준은 느슨합니다. 개발사업자 눈치만 보는 조건부 승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구의회 인근 120m 제한 부지에 70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용적률 1084.58%, 조망권과

경관을 무시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의도적 방치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구민은 외면당하고 특정 자본만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천 세대의 유입에도 오래된 자료로 평가하고 '영향 없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실제 교통은 마비 수준인데도 면죄부만 반복 발급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통영향평가입니까?

게다가 구민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초단체 의견을 묻는다지만 시점은 빠르고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우동 그랜드호텔 건만 보더라도 4년간 변화된 상황에도 과거 자료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해운대는 이미 교통 환경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기후 위기, 미세먼지, 도로 포화 등 경고는 계속되지만 행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council.haeundae.go.kr

현재 승인되거나 논의 중인 건물만 보더라도 사태는 심각합니다. 홈플러스 부지 51층, 구[舊] 갤러리아 부지 74층 실버타운, 구 제일교회 부지 70층 주상복합 건물, 구 그랜드호텔 49층 등 해운대 하늘은 더 이상 구민의 것이 아닌 자본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과 부산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구민의 권리와 자부심을 지킬 독립된 자치 주체입니다. 형식적인 심의와 요식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승인된 초고층 건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조망권, 교통 환경, 주민참여 등 모든 요소를 다시 점검하고 난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도시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 최명진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하나, 초고층 건물 조망권 경관 기준 마련.
 - 둘,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 의무화.
 - 셋, 교통환경영향평가 현실화 및 유효기간 단축.
 - 넷, 구 의견 반영 가능한 심의 제도 개혁.
 - 다섯, 승인 사업 전면 재검토.
- 해운대는 기업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부서 검토의견

건축과

현황/계획

- 초고층 건물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권자로, 해운대구 경관 저해 방지 대책 마련
- 초고층 건물 주민 불편사항은 부산시에 민원 전달 및 조율 진행





5분 자유발언

블루라인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기금'을 협약대로 집행하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5.2.)

최은영 의원(중2,좌2,송정동)



발언요지

- 주차장 조성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투명한 기금내역 공개
- 주차환경 개선계획 수립 촉구 및 협약 이행사항 점검



저는 오늘 해운대구청과 해운대블루라인 간 체결된 협약의 이행 실태와 그에 따른 기금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년 블루라인파크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해운대구청은 해운대블루라인과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기 순이익의 3%를 매년 주차장 조성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받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2024년분 4억 1000여만 원을 포함한 약 7억 7000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조성액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금이 정말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에 쓰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미포와 청사포 지역의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극심한 주차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엄청난 관광객들로 골목까지 차량이 가득 들어차고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결국 주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구청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약에 제시된 주차장 조성 기금은 분명한 목적이 부여된 재정사업입니다. 비록 별도의 법정 기금 항목은 아니지만 양측이 명확한 용도를 정한 약정 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 기금을 일반적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블루라인 인근의 주차 해소와는 무관한 지출로도 집행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 정신을 무시한 행정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미포 지역에는 120면 이상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문탠로드 주차장에 8면 이상의 버스 주차장을 확보 그리고 청사포에는 8면 이상의 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여 1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일반 승용차 주차면수만 확보하고 버스 주차장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council.haeundae.go.kr

이로 인해 대형 관광버스가 도로를 점거하여 주정차하고 있으며, 대형버스의 불법 유턴 자행 등 인근 주민들은 통행 불편과 안전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과 협약은 완전히 따로 놓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협약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조성 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블루라인파크 사업으로 인한 주차 수요 해소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기금운용 방식을 협약 취지에 맞게 재설정하십시오.

둘째, 기금의 누적 수입 지출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고 해당 사업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십시오.

셋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포함한 협약 미이행 사항을 전수점검하고 필요 시 해운대블루라인과의 재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십시오. 특히, 관광버스 단체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버스 주차장은 필수입니다.

협약에 의한 기금은 단지 블루라인파크 수익 일부가 아닙니다. 그 수익 뒤에 가려진 주민의 고통과 인내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실제 주차공간 조성과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로 이어질 때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전국이 부러워하는 관광명소입니다. 미포와 청사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해외, 국내 관광객이 줄지어 찾는 해운대의 얼굴입니다.

행정은 관광의 성공을 자랑하기에 앞서 그 성공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먼저 돌보아야 하며, 관광사업이 주민 불편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협약의 의미를, 신뢰의 가치를 구청은 다시금 되새기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의견

교통행정과

현황/계획

- 민원 발생이 적은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 확보 노력
- 해운대블루라인파크와 관광버스 주차장(정류장) 조성 관련 논의 병행

주차행정과

현황/계획

- 블루라인파크 사업 관련 주차수요 해소 목적에 맞게 조성기금 운용
- 2026년도 용역 시, 지역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반영 예정



 **5분 자유발언**

**청사포를 관광명소라 부르기 전에...
"공중화장실"부터 지읍시다**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6.5.)

유점자 의원(중2,좌2,송정동)



발언요지

- 청사포 물양장 내 태풍 피해 이후 공중화장실 부재
- 해운대구 정체성을 반영한 공중화장실을 신설 요구



청사포는 우리 해운대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어촌 마을이자 점점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모여드는 이들과 해안 철길을 따라 산책하거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SNS 명소를 따라 청사포를 찾는 관광객들까지 이제 청사포는 단순한 어촌을 넘어 복합적인 관광자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해운대구는 청사포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총 9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방파제 연장, 다목적센터 설치, 환경 개선, 마을 경관 정비 등의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청사포 한가운데인 물양장에는 지금 공중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2022년 제11호 태풍 '하남노'로 인해 물양장 내 기존 화장실이 파손되어 철거된 이후 현재까지 임시 화장실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 하나 없는 어항, 관광객은 점점 늘고 있지만 주민과 방문객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조차 부재한 이 현실을 과연 관광도시 해운대가 맞이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청사포를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들은 인근 상가를 찾아 눈치껏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상당 거리를 이동해서 용변을 해결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은 단순한 시설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청사포를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행정의 방향성과 현실 현장의 불일치에서 오는 행정적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어촌뉴딜 300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사업을 계획하거나 예산을 따로 확보해 설치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공중화장실을 명물화하여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색과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화장실을 설치하며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청사포의 해안 경관, 어촌 감성, 해돋이 명소라는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화장실을 설계하고,

council.haeundae.go.kr

쾌적하고 안전한 내부 공간을 조성한다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해운대의 명소이자 콘텐츠로 기능하는 명물 화장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청사포 물양장 내에 지역성과 경관을 반영한 공중화장실을 조속히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미루지 말고 어촌뉴딜 사업 내에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나 머물

수 있는, 머물고 싶은 청사포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부터 갖추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청사포를 진정한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해운대구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해양진흥과

현황/계획

- 관광객·지역주민을 위한 공중화장실 위치 선정 및 설치 검토
- 구청장 현장방문으로 현장 소통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해결방안 마련





5분 자유발언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 필요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6.5.)

김상수 의원(중2,좌2,송정동)



발언요지

- 해운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구 차원의 지속적인 시·중앙정부 협의·건의 필요



1990년대 중반 조성된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는 현재 기반 시설과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며 도시 기능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고 부산시도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4월 도시 재정비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정비 필요성에 대응해 왔으며, 이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수립될 부산시 기본계획에 해운대의 여건과 주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도지구 선정에서 주민 동의율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동의율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용적률의 현실화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존 용적률의 현실화를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해운대 다수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존 용적률이 250%에 불과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 용적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상향 여력이 제한되며 이는 사업성 확보에 장애로 작용합니다. 기존 용적률은 부산시장이 기본계획을 통해 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해운대 실정에 맞는 기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구 차원에서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시 조례’ 제10조는 특별정비계획의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41%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해운대처럼 기존 용적률 자체가 낮은 지역에서는 용적률 상향 여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 기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참여 유인이 약화되고 사업성

council.haeundae.go.kr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산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용적률 조정과 기여율 산정 방식에 대한 지역 맞춤형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 동의 확보와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 간 이해도와 기대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와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 자체가 주민 의견 반영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동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동의시스템

도입을 시에 건의하고 주민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설득에 집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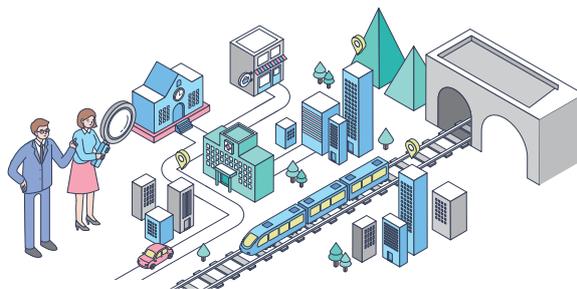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해운대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는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운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와 시, 중앙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 검토의견

건축과

현황/계획

-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공람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부산시에 건의 검토
- 관련 법령·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민 소통·홍보 강화, 제도 보완사항은 부산시에 적극 건의



 **5분 자유발언**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6.5.)

이상곤 의원(재송1동)



발언요지

- 생명 나눔과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바램



다가오는 6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법정기념일인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국제헌혈운동 관련 기관이 지난 2004년 제정한 세계헌혈자의 축제로 A·B·O 혈액형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카를 란트슈타이너(Karl Landsteiner)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혈액을 무상으로 기증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날입니다.

저희 해운대구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세계 헌혈자의 날인 6월 14일을 해운대구민 헌혈의 날로 선포하였고 헌혈 주간을 지정해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생명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과로 인하여 코로나19 시기에 전국 대부분 센터의 헌혈인구가 줄어들었는데 해운대구 헌혈센터만큼은 유일하여 약 14% 증가하여 전국에서 해운대구가 헌혈 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하여 헌혈 가능 인구는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혈액 수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전공학과 첨단 과학기술로도 인간의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물질도 없으며 수입할 수도 없고 오직 헌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주 헌혈 층인 10~2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20대의 헌혈도 같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혈액 부족의 위기는 앞으로 만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경우 2024년, 2025년 20대 헌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년 새 2774명, 0.093%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혈액 사정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혈액이 자급자족이 되는 데 비하여 서울과 부산은 자급자족이 안 되어 다른 도시에서 항상 빌려서 수술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심각한 현상이

council.haeundae.go.kr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생명의 꽃을 피우는 가장 따뜻한 나눔 헌혈에 동참합시다. 헌혈이야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주변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60대인 저도 헌혈에 적극 참여하여 130여 회 헌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초의

따끔함을 이겨내고 타인의 생명 존중을 위해 헌혈에 기꺼이 동참하는 헌혈자들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숨은 영웅이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최고의 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많은 분이 헌혈에 참여하셔서 생명 나눔과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도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서 검토의견

보건정책과

현황/계획

- 직원 및 유관단체 ‘헌혈의 날’ 운영과 지속적 참여 홍보로 헌혈 문화 정착 추진



5분 자유발언

공공시설 운영, 해운대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6.5.)

서창우 의원(좌1·3·4동)



발언요지

-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
- 공공시설 통합·전문화로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및 신속한 민원 대응 필요



해운대구는 인구 38만 명의 대규모 자치구이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약 120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가며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운대구는 관광과 일상이 복합된 도시로 해수욕장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장산과 문화·관광·체육시설, 환경·주차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현재 소수의 행정조직에 의해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력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며 유지·보수가 지연되고 운영의 전문성은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보직 체계를 가진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서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쌓이기 어렵고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 성수기마다 해수욕장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많은 직원이 주말과 야간에도 초과근무를 감내하고 있지만 과중한

근무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직 체계 내에서 인력과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 차원의 시설관리공단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해운대구 전역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통합·전문화하여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을 통해 우리는 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민원에 더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수기 집중근무와 연장근로 등 공공시설 운영 부담이 특정 부서나 직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적절한 처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대구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77개 구·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council.haeundae.go.kr

설립하여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 공단은 최근 5년 이내에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처럼 전국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일수록 공공시설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일수록

효율성과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구 차원의 공공시설 운영 체계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해운대구가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제도적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

기획예산과

현황/계획

- 공단 설립 시 상당한 재정 소요 발생, 낮은 수익성으로 전액 구비로 보전할 경우, 재정 악화 등 우려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설립 여부 검토





5분 자유발언

해운대구 해운대로 대로는?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6.19.)

이상곤 의원(재송1동)



발언요지

- 해운대로 일원 도로변 관리 상태 확인과 정비 요청



작년에 해운대해수욕장은 약 916만 명, 송정해수욕장의 약 216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구청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넘버원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었고, 올해는 해운대만의 프로모션 준비로 해운대 해수욕장이 10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 등 여름이 길어지면서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이 앞당겨지고 폐장일도 연장되어 해수욕장 운영 기간도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해운대구의 얼굴, 해운대로의 민낯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해운대로를 두 번 왕복하며 대로변의 실상을 이야기한 5분자유발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손님맞이는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원동IC에서 중동역까지 해운대로변을 걸으면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정리를 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고,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며 잠시 쉬는 교통섬 삼각지의 보도블록이 구멍이 난 상태로 한 달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이 위험을 느껴 모래주머니와 폐콘크리트를 주워 와서 땀질을 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지켜볼 때마다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는 쓰레기는 언제까지 모아둘 것입니까? 더 많이 쌓이도록 더 지켜봐야 됩니까?

장마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20여일 이상대로변에 우산도 고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울여름은 충분히 보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숙성되고 있는 해운대로변의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보고 계십니다. 분명 이곳이 해운대 맞죠?

종류도 제각각 쓰레기 백화점처럼 다양하게 모여있고, 풀에 가려져 있을 만큼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council.haeundae.go.kr

어떻게 대로변에 타이어가 있는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걸까요?

이 사진은 어제 찍은 센텀고를 가는 대로변 보도블록 상태입니다. 한가운데 오래된 썩은 가로수 그루터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약 15m 높이의 이곳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해운대로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친 것을 보니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무성한 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로변의 실상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해법은 있을까요? 빨리 수십 그루 비어 있는 장소에 가로수를 심거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수를 심지 못할 경우에는

미관과 안전을 위해 우선 임시로 보도블록을 채우고, 나중에 전체적인 보도블록 교체 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간에 무성히 자란 풀을 관광객들이 오고 가며 감상하고 있을 것입니까?

두 번째로 원동IC에서 중동역까지, 약 7.5km이고 왕복 15km를 18개 동이 구역을 나누어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구역 책임제를 부여하면 부서 간 서로 미룸이 없이 깨끗하게 잘 정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끄러운 해운대로가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해운대로, 정리 정돈된 해운대로가 되어 오고 싶은 해운대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서 검토의견

홍보협력과

현황/계획

- 정비 필요 사항 신속 조치 및 환경순찰 강화
- 해운대로의 청결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쾌적한 환경 유지 및 관리



5분 자유발언

해운대구청은 KTX-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적극 추진하라!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6.19.)

최은영 의원(중2,좌2,송정동)



발언요지

- KTX-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촉구



지난해 정식 운영을 시작한 동부산권 최초의 고속열차인 KTX-이음의 가장 최우선 정차역은 누가 뭐라 해도 신해운대역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민은 신해운대역 정차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정차역 결정이 임박했던 작년 9월에는 민·관이 함께 신해운대역에서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차 유치에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발표는 부전역 단독 정차로 결정되어 해운대구민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당시 신호체계와 안전성 확보, 운행시간 최소화 등의 이유로 정차역 추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3대에 불과한 KTX-이음 운행 편수를 향후 9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속도와 운행 안정성이 확보되면 정차역 추가 검토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정차역 확대 여부가 단지 기술적 제약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행정의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사안임을 나타냅니다.

기술 여건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역 수요와 교통 형평성을 반영한 전략적 결단이 지금 절실합니다. 주민의 실질적 교통권 확보를 위해 보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차 지금 시급한 것은 의지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신해운대역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신해운대역은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길 청사포, 송정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할 뿐만 아니라 중동·좌동·송정동 등 인근 거주 인구만 하더라도 13만 4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부산 내 단일 역세권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요 기반으로 KTX 정차 시 직접적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해운대역은 단순한 광역전철역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속열차 정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된 역으로, 2면 4선식 형태의 쌍섬식 승강장 구조, KTX 정차에

council.haeundae.go.kr

충분한 플랫폼 길이, 고속열차 통과에 적합한 선로 배치, 스크린도어와 신호 설비, 넉넉한 주차 공간과 진입도로 등 이미 기술적·물리적으로 정차가 가능한 준비된 정차역입니다.

여기에 인근 53사단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인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업과 인구 유입이 늘고 교통수요도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해운대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환승 거점으로 광역전철과 고속열차가 연결되는 입체적 구조를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까지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해운대역의 KTX-이음 정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실행을 강력 촉구합니다.

첫째, 해운대구청은 해운대역 정차 유치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의 문지방이 닳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구체적인 수요분석 자료 제출, 기술적 정차 가능성에 대한 근거 보강, 정차 이후의 지역 교통 운영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KTX-이음 유치를 위한 사전 대비로 환승센터, 셔틀버스, 시내버스 노선 확충 등 대중교통 연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해운대 동부권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운대는 이미 동부산권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신해운대역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성 향상을 넘어 해운대의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구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신해운대역이 KTX-이음 정차역으로 추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부서 검토의견

교통행정과

현황/계획

- 향후 열차 증속 및 증편 예정에 따라 해운대 정차 지속 건의 추진
- 신해운대역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추진
- 시내버스 증편 및 노선 개편 등 부산시 지속 건의



5분 자유발언

올림픽공원 금융자사고 유치 무산, 공공성 침해와 행정 오만의 결과가 아닌가?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6.19.)

원영숙 의원(우2·3동)



발언요지

- 올림픽공원은 복합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 추진되었음을 지적



이번 부지 선정은 지난 6월 12일 부산 금융자사고 부지선정 위원회가 남구 용호동 부지를 최종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의 유치 제안은 탈락하였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단순한 경쟁 결과가 아닌 행정의 절차성과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운대구가 제안한 부지는 공공적 가치가 매우 큰 도심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경기를 수영만에서 개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하고 휴식하며 각종 축제를 즐겨온 이 공간은 도시생태계와 지역공동체에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필요할 때마다 유희부지로 취급되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 차례 없이 교육시설 유치 후보지로 제출한 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주민 불신과 지역사회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 행정 추진은 반드시 재발 방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구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이 현수막 게시, 반대 서명운동 등 격렬한 반대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공공정책은 그 내용만큼이나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행정 결정은 좋은 사업조차 실패로 끝나게 만듭니다.

셋째,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해운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남구가 제시한 부지는 현재 공터 상태로 있는 부지고, 강서구가 신청한 부지는 택지개발지구여서 학교 설립에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두 부지 모두 주민 반대가 없었습니다.

반면, 해운대가 신청한 부지는 이미 잘 가꾸어진 올림픽공원이 대상 부지여서 공원 존치에 대한 논란, 시민 안전을 지키는

council.haeundae.go.kr

침수 예방용 우수저류시설이 있는 장소, 부지 선정위가 제시한 입지 선정 조건 미달, 기존 공원을 이용 중인 주민들과의 충돌 등 복합적인 문제 요소를 안고 있었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지 유치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공재는 행정의 자산이 아니라 주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모든 개발과 유치 사업은 주민의 동의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은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책

설계시스템을 반드시 정비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지 탈락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행정의 투명성, 주민과의 신뢰가 왜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절차적 정당성은 행정의 출발선입니다. 이제라도 해운대는 이러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통해 더 나은 도시, 더 신뢰받는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서 검토의견

기획예산과

현황/계획

- '부산 자유행 사립고 설립 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올림픽공원 부지 추천



 **5분 자유발언**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지속가능
공공서비스 혁신**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6.19.)

김백철 의원(좌1·3·4동)



발언요지

- 행정 전문화, 주민 편의, 재정 효율화, 고용 창출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



현재 해운대구는 부서별로 2개의 해수욕장을 비롯해 관광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영시장, 환경기초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행정력과 전문성 분산, 업무 비효율, 예산 누수,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행정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첫째,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순환근무체제로 운영되는 구청 직영 조직과 달리 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이자 지방공기업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장기적 전문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기술 축적을 통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자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단순 예산집행이 아닌, 책임 운영 체계 기반의 자율 경영이 가능하며, 강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민간위탁 중인 경우 위탁업체의 이윤이 아닌 공공성을 우선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큰 행정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민원의 혼란이 많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공시설 운영의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하여 각종 시설 등을 일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민원 처리 속도는 빨라지며, 공공서비스 품질 또한 표준화·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council.haeundae.go.kr

기존 민간위탁 기관의 근로자들이 공단 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하며,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뒤따릅니다.

공단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채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과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소극적 운영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고 자율적 경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적 예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단 설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 경영 방지와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엄격한 공단 운영 조례 제정, 이사회 및 감사제도 도입, 주민 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추진되어왔고,

4번의 예산편성이 시도되었으나 시기상조와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로 결국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서울 기초지자체에만 24곳, 전국 기초지자체 77곳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남구 시설관리공단,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등 각 지자체마다 특성을 반영하여 공단의 범위와 기능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해운대구청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설립 추진계획 수립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행정 전문화, 주민 편의 증진, 재정 효율화, 지역 고용 창출이 모든 목표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대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부서 검토의견

기획예산과

현황/계획

- 공단 설립 시 상당한 재정 소요 발생, 낮은 수익성으로 전액 구비로 보전할 경우, 재정 악화 등 우려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설립 여부 검토



건의안 · 결의안



대표 발의자 유점자 의원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 반대 결의안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 9. 10.)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보다 1.8%, 343명 감소하였다. 영유아 수 급감으로 인해 부산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감소율 1위로, 4년 뒤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4곳은 문을 닫는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운대구에 추진하는 ‘직장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은 직장 부모들에게 필수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 내 어린이집 수는 2017년 169개소에서 2024년 7월 기준 152개소로 감소했다. 올해 7월 기준 해운대구 내 휴·폐원 접수된 어린이집은 총 18곳으로, 2022년 7개소, 2023년 16개소 등, 매년 급증하며, 이러한 폐원 사례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2021년에 실시된 해당 사업의 수요조사에서 예측된 이용 예상 유아는 현재는 6~8세로, 이미 어린이집 이용 연령을 벗어났다. 당초 이 사업이 목표로 했던 어린이집 부족 현상 해소라는 목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설령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수요가 존재한다면, 인근 폐원 어린이집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공공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형 어린이집이 건립될 예정지는 해운대구 중동 오산공원 인근 녹지지역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형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자연 휴식 공간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업은 이미 3차례나 해운대구청 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직장 부모들을 위한 양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주민들의 휴식처인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대형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사업 예정지의 토지는 현재 평당 157만 원이지만, 사업 시행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 평당 1억 원이 된다. 사업예정지 총 면적 1,463평의 임야는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57만 원이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 장산역역세권으로 평당 약 1억 원으로 급등한다. 이는 주민들의 소중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예산낭비이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들의 쉼터인 오산공원의 녹지를 훼손할 위험이 크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어린이집 신축 사업계획에 결사반대하며,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공익성을 변질시키고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특혜성 난개발 사업인 녹지 내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결사 반대한다.
- 하나.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존하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폐원 어린이집 재활 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건의안 · 결의안



대표 발의자 원영숙 의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 9. 10.)



지난해 10월, 표류 중이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재개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부산시에 접수되었고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논란이 있었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은 여전하다. 2014년 부산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 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감면예정액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203억 원이며, 30년간 6천억 원이 넘고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해운대구가 거두어 구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수천억 원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조망권 침해와 학습권 보호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호텔이 삭제되었으나, 영리시설인 상가는 기존 9,504㎡에서 25,666㎡가 되었고 요트클럽도 기존 1,376㎡에서 14,502㎡가 되었다. 상업적 시설의 면적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본 사업이 진정으로 감면대상인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업체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운대구는 즉각 재검토하여 명확한 감면기준 적용과 함께 투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 사업 시행 전에 요트경기장 주변 교통대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요트경기장 주변은 현재도 병목 현상이 심한 교통지옥 구간으로 재개발로 인해 현재보다 통행량이 증가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질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행 전에 요트경기장 주변 도로를 확장·연장하여 쾌적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트경기장에 시민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명소화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의 발상지로 1986년 4월에 준공된 이후 38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 되어 매우 열악하며 주변은 슬럼화로 우범지대가 된 현 상황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시급하지만 2014년 당초 협약한 총사업비 1,623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213억 원이 줄어들었다. 10년이나 지났지만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 점에 대해 과연 시민편의 시설의 확충 등 쾌적한 시설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요트경기장은 해운대의 관문에 위치하는데 변경안과 같이 거대한 철재창고형 요트계류시설이 들어선다면 해운대의 첫인상에 눈살이 찌푸러질 것이다. 창고형 요트계류시설 대신 야드형 육상계류장에 요트를 계류하고 LED 표지등을 설치하는 등 주·야간에 요트 그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인 마리나 명소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이에,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의 의견이 배제된 재개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운대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특정업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라!
- 하나. 부산시는 사업 시행 전에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쾌적한 교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라!
- 하나. 부산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재개발을 추진하라!





건의안 · 결의안



대표 발의자 김백철 의원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 10. 11.)



해운대그린시티는 1990년대 초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0만 호 공급을 계획하며 건립을 추진한 신도시로, 당시 도시설계를 수립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의 탁월한 생각, 가치 및 의지가 잘 반영되어 지역의 둥근 모양을 잘 살려 도시를 만들었고, 주거지와 상업지구, 공원 등을 조화롭게 배치,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 풍부한 녹지 공간, 일관성 있는 건물 높이 설정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명품 주거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기 계획과는 달리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개발업자들이 기존의 도시 설계를 무시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일관된 스카이라인이 훼손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초기 설계자의 의도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원래 목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이 진행될 경우, 명품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4층 이하 연립주택용지로 계획된 대상지는,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5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미개발지로 남아있습니다. 애초 사업을 제안한 등기상 261억 원에 토지소유자가 된 업체는, 미심쩍은 매매로 올해 5월 서류상 9190억 원의 차액을 남기고 사업을 철회한 후, 매입한 다른 회사가 지하 2층, 지상 29층의 4개동 530여 세대를 개발사업으로 용도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토지상승분 199억 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2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린시티 내의 노후 열수송관 정비 및 교체로 공공기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기여는 부산시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특정기업의 매매거래, 꼼수 특혜 개발제안에 대한 의혹과 주민들이 적립해 놓은 기금을 고갈시킨 상태에서 민간에게 공공기여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산시의 의도는, 다분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하고 분명한 해명과 주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개발 제안 일련의 과정과 공공기여의 제안에 대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운대구청은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제정되어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해운대그린시티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도시재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계,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편리한 교통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만 변경하게 되면 해운대그린시티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좌동 1360번지 대상지를 비롯한 특혜 등의 시비가 있음에도 어느 한 부분만을 핀셋 개발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된다면 10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의 새로운 정비계획은 큰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도시환경이 무너지는 해운대그린시티의 훼손과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도시재설계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특혜와 형평성과 공공성에 어긋나는 공공기여로 좌동 1360번지 용도변경 절대 반대한다.

하나. 해운대그린시티 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구간만의 용도변경을 자제 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도시 재정비 추진하라!

하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한 해운대그린시티 재정비 사업 조속히 시행하라!





건의안 · 결의안



대표 발의자 원영숙 의원

공정 과세 실현!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 건의안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 2. 11.)



해운대구의회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조세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더베이101'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과세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더베이101'은 본래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설로,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재 '더베이101'은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대규모 상업시설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급 레스토랑과 주류 판매점, 상업용 임대시설 등이 주된 사업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 운영 형태는 해양레저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3년 10월 부산시의 문화·자연 유산과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고시를 통해 '더베이101'의 건물에 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현재 전액 부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시·도지정 문화유산이자 자연유산 기념물인 해운대동백섬 내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약 7천만 원의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전액 감면이라는 과도한 혜택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공공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세금 정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금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불명확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내 수익 부동산의 감면 타당성 연구"정책과제(2021-05)로 채택되어 '더베이101'에 대한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 내 수익사업용 부동산과의 과세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며 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정책제언을 진단 받았다.

해운대구의회는 제도의 미비로 공정과세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과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공공재정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가 실현되어 지방자치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더베이101'의 상업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토지 세금 감면 혜택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부산광역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즉각 개정하고, 세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제한할 것을 건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3호를 신설하여,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게끔 하여, 더이상 상업시설이 공익 시설 내에 있다는 명분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청이 '더베이101'의 사례와 같이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세금 감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구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당 사례에 대한 제도적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공공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높여 세금 감면 정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공정 과세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이를 위해 해운대구와 관계 기관은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든 지방세 감면 혜택이 구체적인 목적과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해운대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 감면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의와 공익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council.haeundae.go.kr

03

연구단체활동



연구단체활동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 대표의원 최은영 의원
- 회 원 장성철, 김성군, 원영숙, 김미희, 박성식, 송민우, 서창우, 유점자 의원
- 설립목적 순환경제를 위한 해운대구 지속가능한 시책 개발
- 활동기간 2023.5.1.~2025.4.30.
- 주요내용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해 해운대구의 지향점과 가치 정립, 실천방향 개발 등

청년정책연구회



- 대표의원 최명진 의원
- 회 원 서창우, 김상수, 남지원, 박기훈 의원
- 설립목적 MZ세대 청년들의 창업과 청년문화 공간 조성
- 활동기간 2023.7.1.~2024.11.30.
- 주요내용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 활성화

연구단체활동

H.시하이: 해운대시의정활동 연구회



- 대표의원 김백철 의원
- 회 원 문현신,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의원
- 설립목적 챗GPT·AI기술 활용을 통한 정책 개발 모색
- 활동기간 2023.9.15.~2025.9.14.
- 주요내용 챗GPT·AI기술 활용법 강화를 통한 의정능력 향상

ESG경영정책연구회



- 대표의원 김성군 의원
- 회 원 김미희, 박성식, 박지해, 문현신 의원
- 설립목적 탄소중립 녹색성장제도 및 ESG경영에 대한 이해 증진
- 활동기간 2023.9.15.~2024.11.14.
- 주요내용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및 ESG경영을 위한 해운대구의 방향과 노력

연구단체활동

해운대역사문화연구회



- 대표의원 원영숙 의원
- 회 원 문현신, 유점자, 최은영, 이상곤, 김백철, 서창우, 김미희 의원
- 설립목적 해운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도시 브랜드 제고
- 활동기간 2024.7.1.~2025.6.30.
- 주요내용 해운대 문화 역사 브랜드화 및 인문도시 추진



council.haeundae.go.kr

04

의정스케치



2024년 의사활동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4. 10. 7.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2024. 11. 11.

2024년 의사활동



제285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2024. 11. 11.



제2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 12. 20.

2025년 의사활동



제28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2025. 6. 17.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 6. 18.

주요 의정활동



고위공직자 4대폭력예방 및 이해충돌방지 통합교육 | 2024. 9. 10.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 2025. 1. 23.

주요 의정활동



의장단 기관방문 | 2025. 2. 4.



의장단 기관방문 | 2025. 2. 4.

주요 의정활동



의장단 기관방문 | 2025. 2. 4.



고위직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 | 2025. 5. 2.

자매결연 및 타의회 교류활동



대구 북구의회 내방 | 2024. 8. 20.



대구 북구의회 내방 | 2024. 8. 20.

자매결연 및 타의회 교류활동



미국 글렌데일시 내방 | 2024. 10. 24.



미국 글렌데일시 내방 | 2024. 10. 24.

자매결연 및 타의회 교류활동



울산 북구의회 내방 | 2024. 12. 24.



몽골 바가노르구의회 연수단 방문 | 2025. 1. 8.

자매결연 및 타의회 교류활동



몽골 수흐바타르구의회 내방 | 2025. 6. 9.



몽골 수흐바타르구의회 내방 | 2025. 6. 9.

상임위원회 활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현장 방문 | 2024. 9. 6.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비교시찰 | 2024. 10. 21.

상임위원회 활동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비교시찰 | 2024. 10. 21.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현장방문 | 2025. 2. 13.

상임위원회 활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비교시찰 | 2025. 3. 10.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현장방문 | 2025. 3. 20.

상임위원회 활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현장방문 | 2025. 4. 23.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현장방문 | 2025. 4. 28.

2025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의정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